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공청회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본 자료집은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이며,
한나라당의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립니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

진행순서

<p>1부</p>	<p>개회</p>	<p>■ 사회 : 정 태 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 비전위원장 인사말 ■ 축 사 ■ 비전위원회 경과보고 	
<p>2부</p>	<p>발제 및 토론</p>	<p>■ 사회 : 나 성 린 (비전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 전 나성린(비전위원장·국회의원) 경 제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 회 복 지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 육 · 과 학 이 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성·가족·청소년 정현주(前경기여성개발원 원장) 환 경 · 에 너 지 김계현(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지 역 발 전 김성배(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정 치 · 행 정 박명호(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 일·외 교·안 보 주재우(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마무리 발언 	

개 회 사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주 호 영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나라당 뉴비전’ 공청회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10월 비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 저희 한나라당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한 갈망을 풀 수 있게 도움을 주신 90여명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성과있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직접 분야별 발제를 맡아주신 아홉분의 발제자 여러분께 더욱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진일류 국가를 목표로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출범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시련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노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 특히 서민들의 삶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뉴비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진일류국가로의 진화는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서민들 또한 그 과실을 향유하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깊이 고민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비전위원회의 결과물로 내놓은 ‘한나라당 뉴비전’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당의 지도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비전, 정책 등을 바로 세우고 선택하는데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주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주 호 영

인 사 말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
국회의원 나 성 린

여의도연구소가 비전위원회를 가동하여 '한나라당 뉴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한나라당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들 그리고 한나라당 당원들조차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혼란의 조짐이 없잖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외연을 중도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참보수' 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의에 빠진 젊은층을 위한 서민복지대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매우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추구해온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쟁·사유재산권 보호로 대변되는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면서도 정책노선을 보다 중도쪽으로 넓혀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큰 시장-작은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여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불완전경쟁, 불공정거래, 불투명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해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출범하여 6개월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20여명의 한나라당의원님들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비전, 경제, 사회복지, 교육·과학, 여성·가족·청소년, 환경·에너지, 지역발전, 정치·행정, 통일·외교 등 9개 분과에 걸쳐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초엔 그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작업의 결과물인 '한나라당 뉴비전'을 놓고 더 많은 당원과 의원님, 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뉴비전'은 최종안이 아니지만, 7·4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모색할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여의도연구소 주최 공청회에서 당내외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모든 당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의 탄생에 기여하고, 이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
국회의원 나 성 린

축 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 준 표

한나라당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뉴비전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 10월 출범 이후 당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나성린 위원장님, 정낙근 총괄간사님을 비롯한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 90여명의 전문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그 동안 100여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정책과 비전을 연구해서 내놓으신 이번 결과물이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 발전을 위한 최적, 최상의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이나,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만 탓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10년 야당 생활 끝에 어렵게 잡은 정권을 다시 내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당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해야만 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정책 강화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체질을 서민정당으로 환골탈태시켜야만 합니다.

주거, 보육, 금융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과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통 큰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좌클릭, 우클릭 논쟁을 벌일 시간도 없습니다. 낡은 이념에 매달려 큰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이제 선진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부터 변해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되, 낡은 틀은 과감하게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정말 중요한 역사의 고비입니다. 한나라당이 승리해서 당당하게 국가를 주도해 나가야만, 오천년 변방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치부심의 자세로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치밀한 연구와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내놓으신 성과물을 토대로, 더욱 밀도있게 비전과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의 비전과 이념, 정책노선을 재정립하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노고를 쏟으신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회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자리하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0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차 례

■ 제1장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	13
■ 제2장 선진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23
■ 제3장 경제 _ 비전과 정책	39
■ 제4장 사회복지 _ 비전과 정책	61
■ 제5장 교육·과학 _ 비전과 정책	75
■ 제6장 여성·가족·청소년 _ 비전과 정책	99
■ 제7장 환경·에너지 _ 비전과 정책	121
■ 제8장 지역발전 _ 비전과 정책	137
■ 제9장 정치·행정 _ 비전과 정책	161
■ 제10장 통일·외교·안보 _ 비전과 정책	177



제1장.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목 차

I. 한나라당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1. 한나라당의 역사적 의의
2. 한나라당의 과제

II. 한나라당의 국가발전목표와 2012년의 시대적 과제

1. 선진화, 여전히 중요한 국가발전목표
2. 2012년의 시대적 과제 : ‘경제’·‘복지’·‘통일’

III. 한나라당의 국가발전 비전과 이념, 실천원칙

1. 국가발전 비전 :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
2. 선진복지국가의 모습
3. 선진복지국가의 이념
4.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원칙

제1장. 한나라당의 새로운 비전

I. 한나라당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1. 한나라당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당은 발전적 보수세력과 합리적 개혁세력을 포괄하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좌파정권 10년의 위험한 국정실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정체성을 굳게 지켜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명박 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온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경제의 커다란 시련이었다. 하지만,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국제공조를 통한 신속한 외화유동성 확보 그리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우리의 전진은 끝나지 않았다.

2. 한나라당의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 2012년의 정권재창출이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좌파 포퓰리즘에 편승한 온갖 반시장적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선진화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은 당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고뇌어린 성찰과 각성,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으로 담보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서민층까지 골고루 확산·공유시키고,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불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당정관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회복, 국론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 발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탈권위 감성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당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 원칙에 대한 내부 합의와 공유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슬하계 노정했던 좌우편향의 노선·정책 갈등은 가치 공유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한나라당의 비전과 이념, 정책노선에 대한 재정립과 내재화를 통해 소모적 당내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가치정당,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II. 한나라당의 국가발전목표와 2012년의 시대적 과제

1. 선진화, 여전히 중요한 국가발전목표

선진화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발전 목표이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중한 결실을 토대로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다.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 배려 속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치적으로 법치주의 위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품격있는 선진사회이다.

2. 2012년의 시대적 과제 : ‘경제’·‘복지’·‘통일’

흔히 2012년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빈곤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러나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란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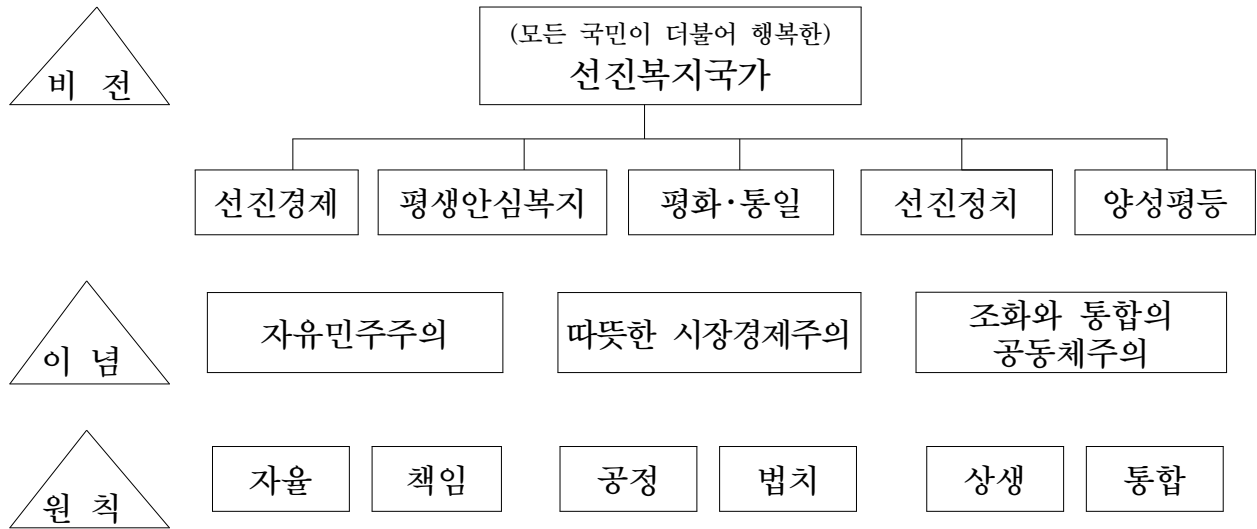
따라서 경제는 여전히 2012년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의 달성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우리 사회는 2019년경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때까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면 선진경제 달성은 어렵게 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대 이상의 실질성장률 유지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가 전체의 R&D 투자규모의 획기적인 증대와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국가경쟁력의 극대화과 그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경제와 함께 복지 또한 2012년의 시대적 과제이다.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일자리 없는 성장의 보편화 등으로 우리 사회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 양극화를 방지하고는 건전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빈곤과 질병, 실업과 은퇴, 산재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 복지와 더불어 2012년의 시대적 과제로 '통일'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과 국제정세에 비춰볼 때, 통일은 그리 멀지 않는 장래에 다가올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다. 통일은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발 위기가 한반도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2012년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지역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안보정세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통일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를 적극 수용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전역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투입될 비용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 질 높은 노동력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면 통일한국은 얼마든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은 향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동북아공동체의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Ⅲ. 한나라당의 국가발전 비전과 이념, 실천원칙

《한나라당의 뉴 비전》



1. 국가발전 비전 :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그리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삼고자 한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열망에 조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경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진 사회적 약자를 확실하게 보듬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는 실천방법과 정책수단에서 좌파 포퓰리즘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적 이념과 정책으로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불완전경쟁, 불공정거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아울러 이념적 갈등을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세력을 제외한 다양한 입장과 노선을 포용하면서 선진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2. 선진복지국가의 모습

한나라당의 선진복지국가는 구체적으로 ‘선진경제’, ‘평생안심복지’, ‘평화·통일’, ‘선진정치’, ‘양성평등’으로 구현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의 선진경제를 달성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기초적인 삶에 대한 걱정없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분단상황의 관리에만 안주하는 평화유지를 넘어서,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평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선진화를 완수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개혁하여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치를 달성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3. 선진복지국가의 이념

한나라당은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그리고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라는 이념적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힘차게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경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칙 위에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주의를 구현한다. 소모적 갈등과 분열을 지양하고, 상이한 가치의 조화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를 실현한다.

4.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원칙

한나라당은 선진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 ‘책임’, ‘공정’, ‘법치’, ‘상생’, ‘통합’의 원칙을 표방한다.

‘자율’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정신이다.


‘책임’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정신이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고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원칙이다. 특권·부정·부패와 같은 불공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반할 땐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는 원칙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상생’은 경쟁은 장려하되 패자가 부활할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다. 사회 각 영역간에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같음을 찾아가는 포용과 공존의 정신이다. 분열을 지양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정신의 구현은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다.



제2장. 선진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목 차

핵심과제 1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0,000의 선진경제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핵심과제 2	고용률을 OECD 평균(60%) 이상을 달성하여 청년, 중년가장 및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핵심과제 3	2020년까지 OECD 평균 복지수준 달성을 목표로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평생안심복지’ 제도를 구축한다.
핵심과제 4	서민빈곤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상생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든다.
핵심과제 5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행복국가를 만든다.
핵심과제 6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핵심과제 7	환경·에너지 산업을 규제대상이 아닌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핵심과제 8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와 4대강 친수구역을 활용하여 광역 경제권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지역발전균형을 달성한다
핵심과제 9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공천제도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루고, 행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정부를 만든다.
핵심과제 10	한반도 신평화구조를 창출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선진통일국가를 실현한다.

제2장. 선진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의 ‘10대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핵심과제 1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0,000의 선진경제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	---

- 1인당 국민소득 \$25,000 달성 전까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되 궁극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사회보장부담률은 궁극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도 OECD 평균수준인 3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를 신속히 폐지한다.
-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와 생산성 제고를 추진한다.
 -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의료, 금융, 교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내수산업을 활성화한다.
- 침체일로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전문인력의 혁신창업 활성화, 글로벌 중견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창업 실패비용 완화 및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해 우수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혁신제품의 초기단계에서 정부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을 M&A할 경우 R&D 투자에 준하는 세제유인을 부여한다.

- 선도벤처와 신생벤처의 동반성장을 위해 ‘Open Innovation R&D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 R&D 협력자금’을 조성한다.
- 국가 R&D 투자를 GDP 5%로 확대하여 7대 과학기술선도국을 실현한다.
 - 정부·공공부분의 R&D 투자를 늘려 국가 총 R&D 투자(정부+민간)를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정부 R&D 투자 중 5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한·중·일 FTA 구축,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 등, 지속적인 FTA 확대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 재정건전성 강화, 금융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빈발하는 세계경제위기에 대비한다.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증대임을 분명히 한다. 세율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지만 경제성장을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세수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한다. 당분간 세수확대는 세원확대(비과세감면 축소), 탈세척결, 재산세 과표 현실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담배소비세, 주세, 환경관련세) 인상 등을 통한 달성이 바람직하다.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30%에 도달할 때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수준 낮도록 제한한다.
 - 신규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원칙을 도입한다. 재정수반 법률안에 ‘예결위 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한다.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공기업들로 구성된 조기경보협의체를 설치하고, 위기관리·극복형 금융공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핵심과제 2

고용률을 OECD 평균(60%) 이상을 달성하여 청년, 중년가장 및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 고용친화적 성장과 투자를 유도한다.

- 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들게 되는 현실을 인식하여, 고용친화적 조세제도를 강화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강화, 무형자산·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고용친화적인 예산집행을 강화한다(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 고용효과가 큰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세·금융지원 강화, 조달계약시 우대한다.

□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한다.

-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행복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원펀드 조성 및 1社 1사회적 기업 창업 캠페인과 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한다.

- 경제위기나 경제침체에 공기업의 고용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정부배당금을 인하 조정한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조세감면, 사회보험지원)를 강화하며,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강화한다(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
-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제도화하여 자발적 비정규직을 활성화하고, 특히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한다.

□ 노동취약계층(여성, 청년, 중·고령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고용보험에서 여성부문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여성고용촉진기금'을 설립하여 여성의 역량개발에 사용한다.
- 5년 한시적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정하여 100인 이상의 기업에게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권고한다.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물리도록 한다.

- 중·고령자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기업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완화한다.

핵심과제 3	2020년까지 OECD 평균 복지수준 달성을 목표로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평생안심복지’제도를 구축한다.
---------------	--

- 2020년까지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GDP대비 20%까지 끌어올리되,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증가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부분을 분리하여 『자활촉진법』을 제정하여 탈수급 이후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일정기간 지급토록 한다.
 - 소득기준의 상향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를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계를 통해 근로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모형을 재설계한다.
- 빈곤아동수당을 도입한다.
 - 빈곤층 자녀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감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해소해 나간다.
 - 의료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2012년까지 노인틀니 보험적용,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소득계층별 본인 진료비부담 차등 상한제를 도입,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가구를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全국민의 5%)의 건강 보험료를 면제한다.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제도와 중증장애인요양 서비스를 강화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총 16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증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요양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 4대 보험재정을 포함한 복지재정을 튼튼히 한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한다.
 - 건강보험제도의 방만한 운영 개혁, 보험료 부담 확대, 행위별 수가제의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원-병원-종합병원)의 역할 구분, 약제비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한다.
 -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복지재원은 국민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점진적인 조세부담률 증가(20%→25%)와 사회보장부담률 증가(6%→10%)로 충당되도록 한다. 조세부담률 증가는 초기엔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척결, 재산세과표 현실화 등으로 실현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와 직접세(재산관련세, 소득세, 법인세)의 균형적 세율인상으로 이루어 나간다.

핵심과제 4

서민빈곤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상생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든다.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한다.

-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R&D 투자 지원,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 납품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와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가 조정제도, 징벌적 보상 등을 강화해 나간다.
-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구제제도를 도입한다.

□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 영세자영업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임대보증금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여 폐업·전업 영세자영업자의 재도전 환경을 제공하고, 폐업자영업자의 빈곤층화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공제(현행 노란우산 공제)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 전통시장 현대화 5개년계획(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을 통해 전국 1,550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SM법(유통법, 상생법)의 시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

□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강화, 확대한다.
- 금융분야에서 나눔의 메커니즘인 ‘기부전용펀드’를 도입한다.

핵심과제 5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행복국가를 만든다.

□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

- 저출산문제라는 국가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1단계: 0~2세 영아보육료 무상지원, 2단계: 3~5세 유아요교육비 무상지원)
- 0~2세 영아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공·사립 보육,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 향후 5년 내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한다.
- 보육교사 임금을 공립유치원 교사 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실화한다.
- 현재 보건복지부(0~3세)와 교육과학기술부(3~5세)로 이원화된 만 3~5세 유아의 보육과 교육 관리시스템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 모든 학교의 창의교육화를 실천한다.(수준별 맞춤수업, 교과교실제 전면 실시, 창의적 수업)
- 고교 다양화·특성화를 정착시키고 마이스터고 확대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 초·중고교 학습지원형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 모든 희망 학생에게 1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 제공,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2~3개의 프로그램까지 자유수강권을 제공한다.
 -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고 담당자 및 교육만족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민중산층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 농산어촌 지역은 완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 도시지역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저소득층 학생 자녀는 방과 후 석식, 방학 중 중식까지 무상 지원한다.
-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GDP대비 1%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30% 인하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하고, 그 중 60% 이상을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지원한다.
 - 시간강사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강의연구교수’제도로 전환하고, 그 보수를 정년 계열 교원 보수의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OECD 수준의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을 확보한다.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우수연구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70세까지 연장한다.
- 과학기술계인사의 정부 요직 할당제, 국회진출 확대(비례대표 할당)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핵심과제 6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선출직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 공천할당제를 확대(30%)하고 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직 여성할당제(30%)를 실시한다.
- 국가 성평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성평등 예산제도를 시행한다.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고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의 정액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복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를 도입한다.

핵심과제 7

환경·에너지 산업을 규제대상이 아닌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 4대강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물환경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 물관리에 관한 토탈솔류션(이수+치수+환경+생태+문화+관광) 사업인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 세계적인 물관리기업 10개를 육성하여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환경관련 사업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매립지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등의 자원순환 녹색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녹색산업 수출강국으로 거듭난다.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
 -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50%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끌어올린다.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현재 30%수준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안전 최우선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 에너지분야의 수출산업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외진출 능력을 가진 대기업과 부품공급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간 상생전략을 마련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시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실용화·표준화를 선도하고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 한국형 원전패키지를 만들어 원자력 수출을 가속화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다.
-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브랜드’를 창출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한다.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 ‘국제공동비축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 에너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쿠폰의 도입과 저소득층 주연료(등유, 프로판가스)의 소비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복지사회를 구현한다.

핵심과제 8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와 4대강 친수구역을 활용하여 광역 경제권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지역발전균형을 달성한다.
---------------	--

- 지방정부에 과감한 권한이양, 지방재정권 강화와 더불어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며,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지역균형을 달성하는 지역발전균형 정책을 추진한다.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한다.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의 광역권 구분을 기반으로 각 광역경제권의 자율적 관리주체로서 '광역경제권 조합'을 설립하여 광역경제권의 성장을 주도한다.
 - 광역경제권 조합의 기능은 광역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도 간 연계사업에 국한함으로써 시·도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 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된 지역은 '지역녹색공동체' 조성전략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선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근간으로 하되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활성화운동으로 발전시킨 '지역녹색공동체'를 조성한다.
 - '지역녹색공동체'의 핵심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반의 조성(경제성), 생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환경성), 교육·복지·보건의료·주거 등 복지공동체 형성(형평성)이 된다.
- 지방소비세 확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를 연계하여 新성장거점을 구축한다.
 - 세종시, 혁신도시(10개), 기업도시(5개)는 개별 추진방식을 탈피하고 광역경제권 발전의 기본구도 하에 지역간 연계 및 협력적 발전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
 - 新성장거점도시는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산업, 물류, R&D, 교육 등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 및 광역적인 연계발전을 활성화한다.
- 4대강 친수구역을 활용한 친환경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한다.
 - 2010년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친환경녹색 개발을 추진한다.

- 4대강을 따라 청정 재생에너지 및 그린홈 단지를 조성하는 등 녹색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좋은 경관과 환경이 유지될 조망지역을 선정하여 첨단 R&D단지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견인한다. 하천 내 스포츠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에 전원형의 주거단지와 선진교육시설을 연계·유치하여 주거와 교육 등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형성한다.

핵심과제 9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공천제도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루고, 행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정부를 만든다.
---------------	---

-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자후보 추천시기를 제도화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도와 권역별 석패율제도를 도입, 비례대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한다.
- 공천제도개혁을 위해 ‘중앙당 심의→당협별 국민참여형 경선’ 방식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 국회개혁을 위해 필리버스터제도와 함께 법안 자동상정제를 도입,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폭력을 근절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공천시 청년의무할당제를 도입, 2·30대 청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한다.
 - 국회의원 공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10%에 해당하는 25석과 5석을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의 50%,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1명을 20대와 30대로 의무공천한다.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공무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정년연장을 유도한다.

-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하며, ‘한반도 新평화구조’의 창출을 추진한다.
 - 비정치적·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협력과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군사적 대화 및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 또한 적극 추진한다.
 -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예: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뛰어넘어, ‘남북한 공동자유경제특구’를 개발한다.
 -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며, 북한주민들의 경제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 한반도 비핵화, 상호불가침과 무력사용 포기의 공식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 축소 등의 추진을 포함한 ‘한반도 新평화구조’를 창출한다.
- 분단관리·평화유지를 넘어 평화통일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선진통일국가를 앞당기는데 노력한다.
 -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평화유지를 넘어 평화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완성하는 선진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통일비용 보다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큰 시장을 포함한 통일의 편익이 더 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평화통일을 통해 완수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득,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선진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한반도 녹색평화존을 조성한다.
 - DMZ에 녹색평화도시를 건설하고 환경, 평화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을 연결하여 ‘공동자유경제특구’를 건설한다.
 -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동부지역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 한반도 주변국과의 ‘평화·통일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목표와 가치에

바탕을 둔 국익중심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함과 함께 주변국과의 양자적·다자적 외교를 병행하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 G-20의 중견국가 위상에 걸맞게 품격있는 공헌외교를 전개하고, 다원주의, 다자주의, 포용주의에 바탕을 둔 국익중심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
- 한·중·일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로의 진화를 모색한다.



제3장. 경제_비전과 정책

견고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선진화

목 차

I. 비전

1. 기존 정책의 평가
2. 새로운 비전
3. 주요 정책 방향

II. 정책과제

1. 견고한 기반

- 【정책 1】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정책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되, 조세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정책 3】 금융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정책 4】 글로벌 차원의 대처를 통해 경제안보를 제고하겠습니다.

2. 따뜻한 배려

- 【정책 1】 따뜻한 금융과 평화 금융을 통해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 【정책 2】 영세업자도 자생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책 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 【정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책 5】 취약계층(여성, 중고령자,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정책 6】 쌀직불제를 이원화하여 소농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정책 7】 남북한 농업이 보완 발전하는 통일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 8】 FTA로 인한 실익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3. 경쟁력 강화

- 【정책 1】 금융과 실물경제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 2】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정책 3】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책 4】 공정거래법을 경쟁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 【정책 5】 인적자본의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6】 농업경영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책 7】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효율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 【정책 8】 농산물시장의 개방, 수출 및 해외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 【정책 9】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제3장. 경제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기존 정책의 평가

-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 큰 시장”의 기치 하에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경제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선진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경제적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40,000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 그러나, 우리 사회는 2019년경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5% 이상으로 실질성장을 해야 한다.
-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 등 시장주도 경제정책과 더불어 IT, BT, ET, NT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적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화정책을 계획대로 다 추진할 수는 없었으나, 이 정책의 추진으로 기업과 시장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 경제위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극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경제위기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함에 따라 2019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 원래 추진하려던 감세, 규제완화와 같은 경제선진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정책의 추진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경쟁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더 부추길 것이다.
-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다.
 -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국가부채,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급증하였다.
 -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지표는 참여정부 때 보다 개선되었지만 체감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 그 결과,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의 불만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새로운 비전

견고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 선진화

- 선진경제 달성을 위해서 잠재성장률 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과정에서 훼손된 경제체제의 안정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 핵심전략은 잠재성장률 5%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감세정책은 추진하지 않되 당분간 우리 경쟁국들보다 조세부담률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재 19%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궁극적으로 OECD평균수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규제완화는 이명박정부 들어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금산분리완화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수활성화와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금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고용 친화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공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되,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해 갈 것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불공정거래로부터의 중소기업의 보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FTA 확대에 따른 피해 보상, 서민금융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 견고하고 안정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안정망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3. 정책방향

- “견고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선진화”를 경제분야의 비전으로 삼고,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정 책	분야
견고한 기 반	-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	재정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되, 조세정책의 원칙을 확립한다.	재정
	- 금융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재발을 방지한다.	금융
	- 글로벌 차원의 대처를 통해 경제 안보를 제고한다.	국제
따뜻한 배 려	- 따뜻한 금융과 평화 금융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다.	금융
	- 영세업자도 자생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한다.	노동
	- 취약계층(여성, 중고령자,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제도화 한다.	노동
	- 쌀직불제를 이원화하여 소농의 소득을 증대한다.	농업
	- 남북한 농업이 보완발전하는 통일농업을 추진한다.	농업
	- FTA로 인한 실익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배분한다.	국제
경쟁력 강 화	-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금융
	-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
	-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한다.	기업
	- 공정거래법은 경쟁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조정한다.	기업
	- 인적자본의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한다.	노동
	- 농업 경영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농업
	-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의 효율적 발전을 모색한다.	농업
	-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출 및 해외개발을 병행한다.	농업
	-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국제

II. 정책과제

1. 견고한 기반

정책 1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재정 지출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경제성장과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수의 증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 세율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세수의 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한다. 당분간 세수확대는 세율의 인상 보다는 세원의 확대(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척결,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담배소비세, 주세, 환경 관련 세) 등의 인상을 통해서 달성한다.
- 불요불급한 예산 및 부처 간 중복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의 5% 이상을 줄인다.

□ 《실천과제 2》 국가채무의 GDP 대비 40% 초과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낮도록 제한한다.
- 복지지출 등 신규 의무지출은 자원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Pay-as-you-go) 원칙을 도입한다.
- 재정수반 법률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협의 제도를 강화한다.
- 공기업부채와 잠재부채 등 다양한 종류의 국가채무를 파악함으로써 국가부채의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한다.

□ 《실천과제 3》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재정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평가의 결과가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환류체제(feedback system)를 확립한다.
-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정책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되, 조세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수입의 증대

- 1인당 국민소득 \$25,000 달성 전까지는 조세부담률을 우리 경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세율인상은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의 균형적 인상을 통해 달성한다.

□ 《실천과제 2》 단순하고 효율적인 조세체계 확립

- 기본적으로 조세체계는 「넓은 세원 - 낮은 세율」, 재산관련 과세는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견지한다.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본세로 통합한다.
-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적 지방세인 종합재산세로 일원화한다.

정책 3 금융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금융공기업군의 경쟁력 강화 및 강력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전 수출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위기 관리 및 극복형 금융공기업군으로 지정하고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금융공기업들로 구성된 조기경보협의체를 설치하고 가동함으로써 위기에 대비하되, 위기 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한다.
- 《실천과제 2》 투기적 해외자본의 규제 및 건전한 국내자본의 육성
 -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M&A에 대해 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국내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 금융자본에 대항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한다.
- 《실천과제 3》 국내-지역-글로벌 3중(3 pillar) 안전망체계 구축
 -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펀드,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 아시아지역내 위기 방지 체계, 국내 외환보유고 등으로 구성된 3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책 4	글로벌 차원의 대처를 통해 경제안보를 제고하겠습니다.
-------------	--------------------------------------

- 《실천과제 1》 한국투자공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국부펀드의 역할 증대
 - 운용자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부펀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차원에서 해외투자 부문을 강화한다.
- 《실천과제 2》 해외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통한 인플레이션 예방
 - 에너지 원자재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정부가 적절히 연대하여 해외투자 주도권을 확보한다.
 - 물가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플레이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물가 관련 정부부처들(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농수산부, 한국은행)을 망라한 ‘물가안정대책회의(가칭)’를 설치한다.
- 《실천과제 3》 원화의 기축통화(강한 원화, 세계의 원화) 정책 추진
 -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아시아국을 대상으로 국지적인 결제통화 위상을 확보·확대하고, 최근 중국의 투자가 증가한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2. 따뜻한 배려

정책 1 따뜻한 금융과 평화금융을 통해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합을 통한 서민금융의 강화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자활 차원의 금융지원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의 기제를 강화하고 확장한다.
- 자활 차원의 금융 지원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결합해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 《실천과제 2》 기부문화 정착과 촉진을 위한 ‘기부전용펀드’의 도입

- 이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생존 중에 해당 펀드의 수익을 본인이 배당받되, 사후에는 원금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이다.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예금을 들 경우 가입금액의 일부 지원을 통해 기부문화의 확산을 촉진한다.
- 민간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보다 편리하게 기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실천과제 3》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완비

-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전제로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집행한다.
- 미흡한 공시제도 개선, 내부자거래의 방지, 거래소 감리시스템의 대폭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실천과제 4》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평화금융의 기틀 마련

- 유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함으로써 북한의 개발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추진체를 만든다.
- 북한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국제적인 자금의 지원 통로 또한 확보함으로써 지역평화를 위한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한다.

정책 2 영세업자도 자생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경쟁력 강화

- 영세 자영업자들의 특성(학력, 직종, 연령, 산업)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채널을 확대한다.
- ‘전통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통해 고객편의시설(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을 확대 및 개선함으로써 전국 1,550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SM법(유통법, 상생법)의 시행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 《실천과제 2》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재도전 환경 개선

- 폐업·전업 계획 중인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보증금채권을 유동화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폐업 자영업자의 빈곤층 전략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행중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행 가입요건(창업 후 1년 이상) 폐지,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300만원한도) 일몰규정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 폐업·전업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현행 고용지원센타가 경험, 학식, 능력을 지닌 중·고령자 위주로 ‘자영업자 경영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토록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민간 컨설팅기관 및 전문가를 육성한다.

정책 3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과도할 경우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의무화

-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대기업이 기술개발, 납품단가 책정 등을 위한 자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적절한 유인을 부여한다.

- 대기업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가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상습적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납품에서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 구제 제도를 확립·운영한다.

정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비정규직 실태의 정확하고 지속적인 파악

- 비정규직법 도입 후 정규직 전환과 실직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비정규직정책에 반영한다.

□ 《실천과제 2》 비정규직의 특성에 따른 구분 및 해당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의 개발 추진

- 비정규직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기업 포함)의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수단을 개발·추진한다.
-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제도화하여 자발적 비정규직을 활성화한다.
- 특히 비정규직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실천과제 3》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 지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의 처우에서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사업장내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차별신청 기회를 확대하고(예: 신청기간 연장) 신청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비정규직의 능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확충하고, 보다 나은 직장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실천과제 4》 비정규직의 사용연한 연장 및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 강화

- 사용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채용시 4대 보험료 지원과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정책 5 취약계층(여성, 중·고령자,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고용보험에서 여성부문의 분리·독립 운영 및
‘여성고용촉진기금’ 설립

- 고용보험기금과 고용보험사업 중 여성부문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여성고용촉진기금’을 설립하여 기업 내 여성인력 대상 차별 완화, 여성친화적 제도개발, 여성의 역량 개발 등에 사용하고, 그 재원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여성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충당한다.

□ 《실천과제 2》 중·고령자의 정년 연장 추진

-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은 2011년 0.55%에서 2016년 0.07%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의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지속적 임금직무혁신·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한다.

□ 《실천과제 3》 ‘청년고용특별법’ 제정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 5년 시한으로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정하여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도록 유도하며, 최소 2년간 고용 보장을 추진한다.
- 청년 추가채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추가채용 하지 않는 기업은 ‘청년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

정책 6 쌀직불제를 이원화하여 소농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소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향상직불제의 실시

- 소득향상직불제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경작면적 보다는 농가의 인원수 및 농가의 다원적 기능 함양 행위를 위한 노력 여부를 실적 기준으로 한다.

□ 《실천과제 2》 대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직불제의 실시

- 소득안정직불제는 가격 위험의 85%를 보상하며,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을 대상

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만 지급한다. 가입농가에게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작물별 재배면적을 보고하고 일정 자조금 적립 의무를 부여한다.

정책 7 남북한 농업이 보완 발전하는 통일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자본주의 농업 생산방식의 북한 확산 지원

- 북한 농업에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도입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일방적인 식량원조가 아닌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

□ 《실천과제 2》 남북한 농업의 보완적 관계를 활용한 동반발전 모색

- 북한의 옥수수를 활용, 돼지를 사육한 후 삼겹살만 남한으로 가져오고 그 대가로 남한의 쌀을 제공하는 방안 등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정책 8 FTA로 인한 실익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FTA 개방의 보완대책 내실화

- FTA 체결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개선한다.
- 농업분야의 지원기준 또한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실천과제 2》 FTA 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확산

- FTA 이행으로 인한 관세인하의 혜택이 수입상과 중간 유통상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국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실천과제 3》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체계 구축

-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조기 타결하여 이행한다.
- 국제통상 전문인력과 FTA 비즈니스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협상 위주로 구성된 FTA 전문인력을 FTA 활용지원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FTA 국내대책 본부가 FTA 활용 지원을 종합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인력과 체계를 정비한다.

- 무역 외에 투자,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도 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실천과제 4》 국내투자의 확대 유도

- FTA 협정문에 포함된 규제완화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 국내투자의 확대 유도는 FTA 허브, FTA로 개선된 투자환경 등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 《실천과제 5》 통상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상정책의 효율성 제고

-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의 수렴, 통상협상 기밀 유지 필요성 등 통상 전략적인 측면,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미국식 통상정책체계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칭 ‘통상위원회’를 신설한다.

3. 경쟁력 강화

정책 1 금융과 실물경제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G20체제와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 G20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홍보하여 G20체제의 장점과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금융 및 외환 분야의 각종 합의와 조치사항은 우리가 먼저 준수하면서 여타 국가에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일부에서 지적되는 무용론 등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다.

□ 《실천과제 2》 금융산업의 국제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되, 현지에 진출한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 부문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국민 다수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각종 펀드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운용하는 기관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부문의 대내적인 활성화를 추진한다.

□ 《실천과제 3》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연·기금의 과도한 개입 규제

- 주주행동주의를 최소화하면서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칭 ‘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을 추진한다. 연금사회주의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를 도입, 연금기금의 과도한 개입은 규제한다.

정책 2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대학 기반 우수·전문인력의 혁신형 창업 활성화

- 기업가정신 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관련 교과 수를 늘리고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잠재적 창업인력이 정규교육을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기업가센터(entrepreneurship center)의 설립을 지원하여 대학내 창업관련 교육, 컨설팅, 투자,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여,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투자자가 협력할 수 있게 한다.
- 대학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입시에서 입학 사정관제를 활용하여 창업 특기자 선발을 지원한다.
- 창업보육 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우수한 전임 센터장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한다.

□ 《실천과제 2》 실패비용의 완화 및 재도전기회 부여방안 마련

- 사업위기 탈출 및 정리를 위한 컨설팅(exit consulting)을 활성화 하고, 사업종결 비용(cost for business closing)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실패 경험자의 재도전을 위해 기술평가 우수업체와 창업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대표이사 개인입보도 기업의 건실도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벤처기업인이 장기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 기존 세금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유망 기술을 개발하던 벤처기업인이 실패를 하는 경우 개발 중이던 기술의 수준과 개발단계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실천과제 3》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의 엔젤투자 활성화

-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인을 엔젤투자자로 활성화하여 멘토와 코치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엔젤을 등록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한다.
- 엔젤투자에 대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활성화한다.

□ 《실천과제 4》 혁신제품의 초기단계 정부구매 확대 추진

-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구매 공무원의 안전성 입증 관련 책임을 일부 면해주는 등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
- 정부주도 경제발전 시기에 적용된 국산 1호기 정책을 준용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KOTRA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 《실천과제 5》 선도벤처와 신생벤처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을 M&A 할 경우 R&D 투자에 준하는 세제 유인을 부여한다.
- Open Innovation R&D 펀드를 조성하여 선도벤처는 신생벤처에서 기술을 소싱하고, 신생벤처는 선도벤처의 글로벌 망을 활용하는 등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공동R&D 협력자금」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해외기업이 신규기술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구매의향이 있는 경우 정부-중소기업-해외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 3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자격사 진입제한 규제의 완화

- 자격사제도 등 진입이 제한된 사업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의 완화·개선을 통해 비생산적 지대를 감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의료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자본유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산업 내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

□ 《실천과제 2》 서비스분야 전문인력의 경쟁력 향상

- 전문대학원 설립, 현장훈련 (on-the-job-training),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형 인재를 육성한다.

□ 《실천과제 3》 서비스업의 효율화 및 대형화 유도

-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도입함으로써 한계 업체의 퇴출 비용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

□ 《실천과제 4》 서비스 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시장 정보수집·분석·제공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사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 및 지역별 특성들을 감안한 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정책 4 공정거래법을 경쟁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규제의 축소·폐지
 -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구성요인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및 지주회사설립 제한 등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별될 경우 폐지한다.
- 《실천과제 2》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 중심으로 재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에 초점을 맞춘 경쟁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독점화와 독점의 기도를 억제하여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책 5 인적자본의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체계의 강화
 - 2016년까지 평생학습참여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토록 하는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평생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인적 자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 여성, 저학력자, 비정규직,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및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정책 6 농업경영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교육, 의료, 문화, 편의 등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
 - 농촌의 교육환경, 의료시설, 문화적 기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인구희박 지역에서는 시설 확충보다는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다.
- 《실천과제 2》 농업의 산업영역 고도화 및 3F 산업으로의 확장 지원

- 농업의 품목적 영역을 식품뿐만 아니라 3F(Food, Fiber, Fuel: 식품, 섬유, 자원, 환경, 생명)산업으로 확대한다.
- 1차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산업구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또한 가공, 유통, 관광의 기반이 되는 교통, 통신 등 인프라를 설치해 나간다.

□ 《실천과제 3》 대농과 소농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적 생태계 조성

- 대규모 기업농과 임차농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물보험제도 및 작황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 소규모 가족농이나 자영농을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한다.

정책 7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효율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농업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 모색

- 농업기술의 개발이 농업 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례를 교훈삼아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논에서 값싼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 소득 문제, 쌀 수급, 식량 자급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기술을 개발·적용한다.

□ 《실천과제 2》 농업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 거대해지고 관료화된 농업기술 관련 기관들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병합하여 연구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한다.
-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한다.

정책 8 농산물시장의 개방, 수출 및 해외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해 다양한 대책으로 대응

- 경쟁력이 낮은 대표적 품목인 쌀농사 비중은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품목인 채소, 과실 등의 비중을 높인다.

- 쌀수입의 관세화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MMA 의무수입량의 증가(매년 2만 톤)를 방지한다.
- 국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단을 개발해 자연스럽게 농식품의 수입을 줄여가도록 한다.

□ 《실천과제 2》 고품질 및 가공 농식품의 수출 추진

-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과 농식품 가공 수출에 주력하며, 수출시 우리와 농식품 선호가 비슷한 일본, 중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실천과제 3》 민간과 함께 국제농업개발 추진

- 정부주도 진행시 ODA 원조를 이용하여 외교적 선린관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한다.
- 민간기업이 국제농업개발을 담당할 경우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유통형 및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형의 두가지로 접근하되, 민간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정책 9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對중국 경제통상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체계적 관리

- 對중국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 유의하여 중국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실천과제 2》 한·중·일 FTA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 한·중 FTA는 중국의 고성장 활용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중국과의 장기적인 통상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중국이 글로벌 수준의 통상체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양자간 FTA 및 한중일 FTA,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3》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을 수립·표명한다. 특히 역내 무역자유화 못지않게 지역 차원의 경제통상제도간 조화 및 선진화, 통상 분규의

합리적인 처리 절차, 중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 방지, 남북관계의 개선 등 논의를 주도한다.


-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 대책을 수립한다.

□ 《실천과제 4》 보호주의 확산 억제 및 통상마찰의 사전 차단

- G20 정상회의와 WTO 다자무역체제 등을 통해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통상외교의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한다.
- 상대국에서 정치문제화되기 전에 이슈를 파악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통상 관련 기관 및 업계가 통상정보를 공유하고, 통상마찰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실천과제 5》 ODA 공여를 통한 외교통상관계 개선

- ODA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적극 공유하는 등 수원국의 필요성을 배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우리 내부 효율과 수원국의 효율을 제고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ODA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ODA 기관들의 전문성을 개선하는 한편 일회성 행사 개최보다는 수원국의 인적자원 개발, 물류 및 통상 인프라의 구축을 우선한다.



제4장. 사회복지 비전과 정책

평생안심복지

목 차

I. 비전

1.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
2.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복지 지형
3. 새로운 비전

II. 정책과제

- 【정책 1】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정책 2】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정책 3】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정책 4】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정책 5】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 6】 모든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 7】 복지분야 일자리를 확충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ی겠습니다.
- 【정책 8】 복지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제4장. 사회복지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틀을 구축하였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 공적부조제도도 갖추어졌고, 보육비 지원, 학자금 융자, 중증장애인 요양 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도 갖추어졌다.
- 사회복지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었으며, 돌봄 서비스는 요보호 아동·한부모에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책임방식에서 지방정부 책임방식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빈곤 사각지대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보완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과 노인에 대한 복지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100조 원을 상회하여 GDP대비 약 9%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한국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의 약 2.2배에 해당, 향후 10여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지형

□ 저출산·고령화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8년 1.19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2050년에는 고령화율이 OECD평균인 25.8%를 뛰어

넘는 38.2%에 달해 일본(39.6%)에 이어 65세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아동 및 가족 급여, 그리고 교육관련 지출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전체 공공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 저성장

-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20.6%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이후 평균 5.3%로 하락하였고 2010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면,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교육주택·금융 등의 수요에 큰 변화를 예상된다. 2019년경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 양극화

- 2003~2009년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70.1%에서 63.2%로 6.9%p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과 빈곤층 비율은 각각 3.3%p, 3.6%p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새로운 비전

평생안심복지

- 좋은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사람을 생애주기(영·유아기, 학년기, 취업기, 은퇴기)별로 빈곤에 빠지지 않고 안정된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빈곤·질병·노령·실업·장애·산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사회복지 ‘비전’은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빈곤·질병·노령·실업·장애·산재 등의 위험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평생안심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표 1> 참조).
-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국가 재정능력이나 경제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국민부담률의 증가 없이도 의료, 보육, 교육, 급식을 포함한 각종 무상복지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무책임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경제나 재정이 파탄나면 서민빈곤층의

미래 빛을 짚어지게 될 젊은 세대들이 누구보다 먼저 그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은 재정능력을 고려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확실한 책임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평생안심복지’가 확실한 책임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미래상은 OECD 선진국의 평균치로 설정하고자 한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5% 전후를 차지하는 高복지지출국가이고 미국과 일본은 10%대 후반의 低복지지출국가이다. 전자는 지나친 복지지출로 현재 재정위기와 복지병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고, 반면에 후자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지출 목표를 장기적으로 GDP대비 2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표 2〉 참조).

〈표 2〉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 계획

구분	20,000\$ (2010년 현재)	25,000\$	30,000\$	35,000\$	40,000\$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	9.0%	12%	15%	18%	20%

-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분명히 한다. 빈곤층에게 시혜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빈곤의 고통을 완화해줄 뿐이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빈곤층이 자력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야 하고 이것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빈발하는 오늘날엔 사회적 기업이나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도 중요하다.
- 복지제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재정능력이나 경제능력을 벗어나는 복지지출로 재정파탄이 발행하면 복지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 국가의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선, 빈곤소외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재정여력에 따라 복지지출을 중산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 1〉 평생안심복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연금제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	EITC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학령기 (초등·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확대 ·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 대학 장학금 확대 · ICL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확충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근로기간 (실직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재정 건전화 · 연금사각 지대해소 · 비정규직 4대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4대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확대 · 비정규직 4대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4대보험 · 재정건실화 · rehabilitation 후, 취업기회확대 · 근로환경개선 · 탈빈곤취업 촉진 강화. 급여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빈곤 취업 촉진 강화 · 급여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보장성 강화 · EITC확대 		
은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 연금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 요양보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요양 서비스강화 · 장애인연금제도 내실화 	

- 전면 무상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부조는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가 긴급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전액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0~5세의 보육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II. 정책과제

정책 1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결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현행 통합급여 체제에서 수요자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혁하여 탈(脫)수급자의 빈곤층화를 막고, 자립의지를 높인다.

□ 《실천과제 2》 근로장려세제(EITC)의 강화

-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기준(소득, 재산)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확대 적용한다. 계획된 영세자 영업자애로의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에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한다.

□ 《실천과제 3》 탈(脫)빈곤 취업의 촉진

-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을 강화한다.
1)기초생활법에서 자활부분을 분리해 ‘자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 이후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일정기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를 축소한다. 2)생계급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학생, 장애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 3)20대 수급자 및 학령기 아동 부양 수급자 가구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예산이나 지자체 자활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응(matching)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한다.

□ 《실천과제 4》 빈곤아동수당의 도입

- 5세 이하의 영유아는 보육수당이 지급되나 6세 이상의 빈곤아동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빈곤층 청소년이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불리한 환경에 머무르지 않게 배움의 기간 동안 빈곤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의 소득기준과 대상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당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육과 문화, 체육 활동 용도의 바우처로 제공할 것이다.

정책 2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혜택 부여

-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현재 부담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대상은 최저임금의 1.5배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한다.

□ 《실천과제 2》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촉진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따로 분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를 기존의 현금 중심에서 바우처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정부가 실업부조를 제공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높인다.

□ 《실천과제 3》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정착

- 고령화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규근로자의 30% 정도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영세사업장의 영세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연금기여금의 수익에 대한 가산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 3 영·유아의 보육·교육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만 0세~5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면 책임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0세~만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를 전액 무상 지원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월 최소 10만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액하여 표준양육비까지 지원한다.
- 장애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 《실천과제 2》 유아시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의 확충

- 국공립시설(5.4%)에 비해 뒤떨어지는 민간보육시설(94.6%)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정책 4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유지하되, 질환별 확대방식은 지양하고 상한제 개념으로 접근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 외형적으로는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의료 기술 발달, 고가 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 실질적인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비급여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비급여 가격을 표준화하여 비급여 전체를 관리한다.

□ 《실천과제 2》 의료안전망 강화 및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 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 결손처분제도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내 여러 부서 혹은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일원화한다.
-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전 국민의 약 5%)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수급자의 차상위계층 진입시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 ‘의료안전망기금’ 마련을 통해 실업·파산·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와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를 지원한다(의료안전망기금 추계액: 4,309억원).

정책 5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 《실천과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안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서비스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노인의 요양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등급외(4등급) 초기치매 및 독거노인에 대한 요양지원을 확대한다.

□ 《실천과제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특성화대학 설립

- 실버 특성화 대학(가칭)을 설립하여 노인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직종을 개발·육성한다(예; 자원봉사지도과, 국제통역과, 문화재관리과, 심리상담과, 환경보존과, 장례지도사과).

□ 《실천과제 4》 고령노인을 위한 주치의제도의 활성화

- 농어촌, 빈곤층, 고령노인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평생병력관리, 전화상담, 방문진료, 보건교육, 진료예약, 중점질환관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6 모든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7%로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 실현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재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총 16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계를 포함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 《실천과제 2》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면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식이 개선되고 경증장

애인의 취업기회도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한다.

□ 《실천과제 3》 장애연금의 현실화 및 활동보조서비스의 개편

-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과 급여량, 본인 부담금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장애연금과 별도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7 복지분야 일자리를 확충하여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직 증원을 통해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상담·사례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제고한다. 현재 정원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3,951명을 증원한다.

□ 《실천과제 2》 학교사회복지사의 충원

- 학교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하여 학생인권 옹호 활동,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진로·여가·문화활동 등을 담당하게 한다. 각 학교별 최소 1인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총 11,160명을 충원한다.

□ 《실천과제 3》 軍사회복지사의 충원

- 병사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적응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겪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군사회복지사를 둔다. 대대급에 1명씩을 배치하여 총 1,424명을 충원한다.

정책 8 복지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세제정비를 통한 복지재원의 마련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부담률의 점진적 상향조정

- 조세부담의 증가는 저축 및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당분간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제정비, 탈세 척결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 향후 1인당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20년까지 각각 GDP대비 25%와 10%까지 상향조정한다.

□ 《실천과제 2》 건강보험의 지출증가 억제 및 재원 확충

-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유인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인다.
-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가벼운 질병은 의원과 보건소가 담당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담당하도록 한다.
- 약제비의 과도한 증가 방지를 위해 약제비 제도를 개편하고 약가(藥價)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도모한다.
- 통합된 건강보험을 ‘정부기금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재정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가정간호사, 임상간호사, 의사보조사 등 저비용의 보건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고비용화를 억제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담배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한다.

□ 《실천과제 3》 지속적 공적연금개혁의 추진

-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서서히 단계적 인상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제5장. 교육·과학 비전과 정책

【교육】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교육행복국가 실현
【과학】 과학기술강국으로 선진경제 달성

목 차

I. 비 전

1. 대내·외적 여건

2. 기존 정책 평가

□현 정부 정책 평가

□야당의 정책 평가

3. 새로운 비전

□비전설정

□정책방향

□분야별 정책 과제

II. 정책과제

【정책 1】 영·유아교육의 맞춤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2】 초·중등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3】 초·중등교육 교육복지·학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책 4】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5】 국가R&D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7대 과학기술선도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6】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고,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인재대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5장. 교육·과학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대내·외적 여건

- 교육은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개인의 행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를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교육강국, 평생학습복지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
- 저출산, 초고령화, 세계화·개방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 노년층 인구 증가를 초래하고, 세계화·개방화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크게 높여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 초·중등교육과 함께, 영·유아교육,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저출산·초고령화·세계화에 대비할 수 없다. 공교육이 실패하면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2. 기존 정책 평가

□ 현 정부의 정책 평가

-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별학교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의 소질·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학교 자율화 노력으로 인해 학교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 책무성을 높여가고 있다. 교육력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이 학생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학력향상을 위한 중점적인 지원 결과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08: 7.2%→'09: 4.8%→'10: 3.7%)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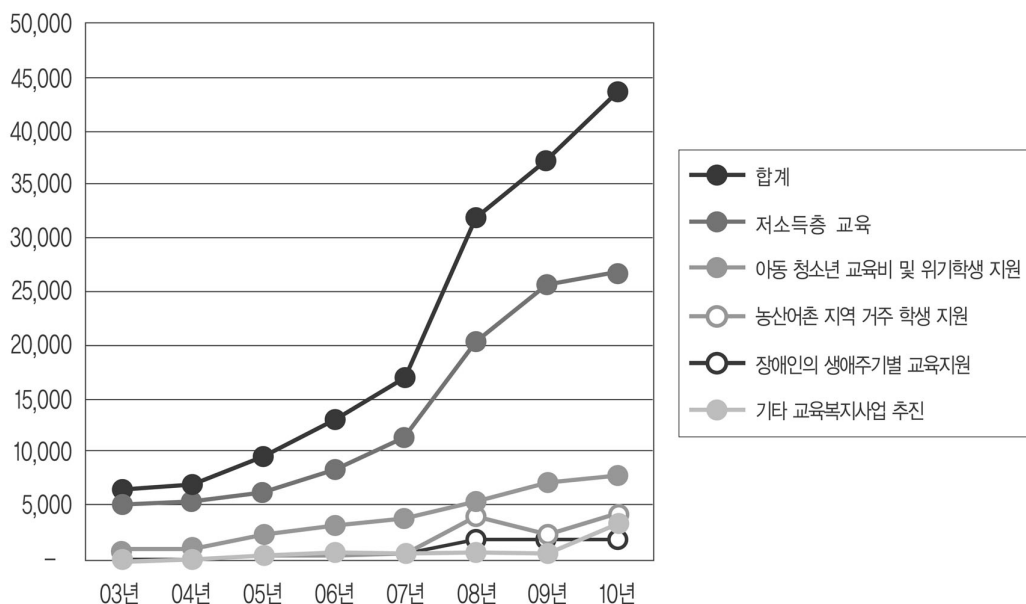
-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하였다. 나아가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였다. 현재 외교,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 선발시 중학교 내신과 독서활동, 체험·봉사활동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

※ '10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천 541억원(3.5%) 감소한 20조 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임

※ 참고: 2001년 사교육비 약 11조 7,540억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사교육비는 20조 400억원, 6년 만에 사교육비 70% 증가

- 저소득층 및 유아·장애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도 크게 확대되어 점차 교육복지, 학습복지사회를 실현해 가고 있다. 저소득층 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5,153억원)과 유치원 중일반(8,145개원) 운영까지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지난 3년간 교육복지 관련 평균 실제지원액은 28,044억 원으로서 참여정부 시기 5년간 교육복지 평균지원액의 약 3.2배에 달하고 있다.

[그림 5-1] 참여정부 이후 교육복지 지원 변동 현황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88개교)과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11개교)을 실시하여 학부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08~)을 통해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335명), 교육연구에 있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대학생들의 취업률 등 교육성과를 대학지원과 연계함에 따라 대학의 교육력과 책무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학생이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도입과 대출금리 인하,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이 학력·자격과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대학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든든학자금 도입 및 대출금리 지속 인하 추진: ('08.2학기) 7.8% → ('10.1학기) 5.7% → ('10.2학기) 5.2% → ('11.1학기) 4.9%

- 하지만, 정부의 교육개혁은 학부모 다수가 충분히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공정성·신뢰성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고, 새로운 사교육 유발 논란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야당의 반대로 법률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복지예산을 참여정부 시기보다 3배 이상 확대했지만 국민의 체감이 부족하여, 정부·여당이 교육복지에 소극적이란 인식을 주었다.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외에 학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

□ 야당의 정책 평가

- 민주당은 교육경쟁 완화, 형평성·복지·인권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학교의 교육력·책무성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민주당은 전교조 주장에 치우쳐 국민에게는 복지로 환심을 사고, 교사에게는 교원평가 법 개정 반대, 학교책무성 약화로 환심을 얻으려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신 상대평가 도입으로 학생 간 성적경쟁을 크게 강화시켰고,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대입제도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켰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교육비는 20조 400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육정책 비교 〉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교육개혁 주체	모든 학부모, 모든 교사 (교육수요자·학습자 중심)	전교조와 그 지지세력 (교육공급자, 전교조 중심)
교육개혁 방향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의 조화 (교육복지도 참여정부 3배)	교육복지 공약에 치중 교육경쟁력 강화노력 미흡
영·유아 보육·교육	맞춤형 국가책임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국가책임 확대 무상보육·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산층·서민 무상급식 저소득층·서민 석식과 방학 중 무상급식 크게 확대	전면무상급식(점심) (상류층에게도 무상급식) 방학 중 무상급식 일부 확대
고등학교 정책	상향 평준화와 고교 다양화·특성화의 조화 고교무상의무교육	고교 획일적 평준화, 고교 다양화 소홀 고교무상의무교육
교육 책무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교육정보공시 강력 추진 → 기초학력 미달자 감소 학교 책무성 강화 → 저소득층 학생 혜택 증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교육정보공시 등 실질적 반대 →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부재 → 저소득층 학생 혜택 증가
학교 자율화	학교 자율화 적극 추진 중앙정부, 교육감 권한과 규제 축소	학교 자율화 반대 중앙정부, 교육감 권한 강화, 규제 강화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 학습관리 무상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프로그램 중심 수익자 부담형 운영
대입·고입제도 개혁	대입·고입에서 내신반영비중 합리화 내신상대평가 개선 일부 입학사정관제 도입 '죽음의 트라이앵글' 완화	대입·고입에서 내신반영비중 크게 확대 '죽음의 트라이앵글' 강화 내신상대평가 도입으로 이기적 성적 경쟁 확대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 부담)	'08, '09년 물가상승을 이하, '10년 사교육비 감소	참여정부 1년 전과 비교하여 말기에 70% 증가 '사교육비 폭탄'

3. 새로운 비전

□ 비전 설정

【교육】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교육행복국가 실현

【과학】 과학기술강국으로 선진경제 달성

- 한나라당은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교육행복국가’를 추구한다. 교육행복국가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여 삶의 행복을 일구어 가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 ‘교육행복국가’는 교육경쟁력과 교육복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수요자의 ‘학습’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크게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교육복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개혁만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교육의 질 강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과 책무성 요구가 필요하다.
- 결국,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교육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경쟁력·책무성 제고’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학습복지 확대’가 가장 중요한 필수과제이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방향

- 쉰생애 학습복지 중 최우선 과제는 공짜점심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교육 개선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출산율 증대 노력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그리고 질 향상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최단기간(향후 5년 이내) 내에 어떤 과제보다 시급하게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현을 핵심 내용으로 한 ‘맞춤형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다. ‘맞춤형 국가책임제’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가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책임지지만, 더 많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서민 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적절하게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복지 전면 확대를 통해 OECD 수준으로 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전체 무상점심보다, 고교 무상교육, 초등학생 종일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서민·중산층 자녀의 석식 지원 확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개인별 학습지원 확대,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 등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므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 학교 교육경쟁력과 학생 학습력을 높여 교육강국을 실현할 것이다. 교육복지 확대만으로 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변화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전문지식과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우수인재의 육성이다. 창의적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면, 학교의 교육력과 책무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강국은 학생 간 입시경쟁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경쟁과 교육력·책무성, 교사 열의를 통해 달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교의 내신 상대평가제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의 입시경쟁은 완화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조장하되, 학교와 교사는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초·중등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전면 확대하여 향후 5년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OECD평균수준(GDP 대비 1%)으로 늘릴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평생학습에 대한 재정 지원을 5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령자의 평생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지원, 대학과 평생교육의 융합, 특히 성인들의 대학 진학, 일과 학습의 융합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원을 확충할 것이다. 이러한 소생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 유비쿼터스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애 전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을 갖추 수 있다.

□ 분야별 정책 과제 (분야별로 핵심과제 제시)

구분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복지·학습복지 확대
영·유아 보육·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 처우 개선 및 국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 5세 영·유아 국가책임 보육·교육 실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3세 ~ 5세 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초·중등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평가방법 혁신 모든 학교의 창의학교화(수준별 맞춤수업, 교과교실제 전면 실시) 고교 다양화·특성화의 정착 (예체능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외국어중점학교)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마이스터고 확대 국립 영재학교 설립 등 영재 교육 활성화 재외국민교육 지원 강화 및 재외교육기관 선진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초·중·고교 학습지원형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OECD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학습지원 시스템 도입·적용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EBS 초·중학사이트 구축 EBS 학부모 지원포털 구축 지역산업-교육-고용 연계 선진직업교육 체제 구축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제도의 타당성·공정성 제고, 형평성 실현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지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 보장체제의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재정 OECD평균수준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 학생·학부모 부담 축소 대학등록금 부담 30% 인하, 학자금 대출이자 사실상 제로화 고등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콘텐츠 대국민 개방 대학생 구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u 포털 구축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대학 진학 활성화 :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체제 개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학습 통합지원 확대 :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를 대비한 “실버학습” 지원 전면 확대 다문화가족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단계별 맞춤형 유비쿼터스-학습체제 구축 	

II. 정책과제

정책 1 맞춤형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실천과제 1》 0세~5세 영·유아의 보육교육 무상지원

○ 0세~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교육 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 1단계 : 0세~2세 영아보육료, 5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2단계 : 3세~4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 3세~5세 유아의 보육·교육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 《실천과제 2》 보육시설 미(未)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소 10만원에서 시작하되, 점차 증액하여 표준양육비까지 지원한다.

□ 《실천과제 3》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을 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 보육교사 임금을 공립유치원 교사 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실화한다.

○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양성을 전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질 높은 교사 양성을 도모한다.

○ 기존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수와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자질을 관리함으로써 유아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인다.

정책 2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창의성 제고와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초·중등학교의 교육 경쟁력과 책무성 강화

- 창의력·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단위학교의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 성적 보고방식을 개선하여 창의인성 교육의 기반을 갖춘다.
 - 창의인성 교육 효과가 미비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해 교·사대의 예비교사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이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의 학습을 강화한다.
- 모든 학교의 창의학교(수준별 학습, 교과교실제) 추진
 - 수준별 맞춤수업, 창의적 수업, 전면적인 교과교실제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 ‘교과교실제’를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 학교에서 수준별 맞춤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생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조속히 보급한다.
- 예체능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확대
 -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외국어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등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한다.
 - 학교별 특성화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교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졸업 후 진로지도(대학진학)를 강화한다.
- 국립영재학교(무료) 설립하여 돈이 들지 않는 영재교육 실현
 - 영재학교의 대상을 과학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어학·예체능은 물론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하여 국립영재학교(무료)를 설립·운영한다.
 - 소외계층 자녀들 중 우수 잠재력을 소지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제’, ‘의무연수제’의 평가결과가 정책 대상자의 선발 지표로 활용되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실천과제 2》 재외국민교육 지원 강화 및 재외교육기관의 선진화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해외에 있는 우리교육기관을 양적으로,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 재외국민들에게 국내에 있을 때와 동일한 무상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외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재외 한국학교 중 일부를 국제학교로 전환해 재외국민·동포 뿐 아니라 현지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한국교육에 대한 수요에 응답한다.
- 한국교육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관광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정책 3 초·중등교육 교육 및 학습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 대폭 개선

-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1항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 고등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성인 중 희망자에게 고교수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교 졸업증도 함께 수여한다.
-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개선
 -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춘다.
 - 유·초·중등교육단계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나간다.

□ 《실천과제 2》 학습지원형 방과후학교의 무상 지원 및 서민·중산층 학생에게 중식과 석식(방학포함) 지원

- 초·중·고교 학습지원형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무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관리·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도서실의 개방, 모든 교실의 학습실화 추진, 컴퓨터실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학생 1인당 1-3개의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모든 희망 학생에게 1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저소득·서민층 학생에게 2-3개 프로그램 자유수강권을 제공한다.
-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유러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방과후학교와 EBS 등 온라인 학습지원사이트를 연계시킨 온·오프라인 연계학습(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한다.
- 방과후학교는 담당 교사의 업무부담 관리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만족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민·중산층 학생에게는 중식과 석식(방학 포함) 함께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은 완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무상급식 지원은 소득수준 하위 30% 학생 자녀부터 시작하여 소득수위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 저소득층·서민 학생 자녀는 방과 후 석식, 방학 중 중식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소득수위 하위 50%까지 확대한다.

□ 《실천과제 3》 안전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가해학생 선도인프라 구축, 학생정신건강검사 확대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및 특별 컨설팅을 통해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을 배치하고, 365일 상시근무체계를 구축한다.
-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초등학생들에게 U-안심서비스 단말기를 보급한다.

□ 《실천과제 4》 맞춤형 학습관리·학습지원 실시 및 EBS 초·중학사이트와 EBS 학부모 지원포털 구축

- 개인맞춤형 학습관리·학습지원 시스템 도입
 - 국가 차원에서 EBS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 내·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학습이력 관리, 온라인 학습진단, 학습컨설

팅, EBS 등 학습컨텐츠 종류 제시 및 학습상황 관리를 추진한다.

- 기초학생 미달학생 온·오프라인 학습관리·학습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1~3인씩 학습멘토 교사 선발·배치를 추진하며, 학력 향상 교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EBS 초·중학사이트 구축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EBS 초·중학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초등 1학년~중학 3학년 대상으로 창의적 교과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강좌, 동영상클립, 교재 등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개별 학습자 또는 방과후학교에서의 유러닝, 온오프연계학습을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EBS 학부모 지원포털 구축

-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를 모은 포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 ※ 초 / 중 / 고 / 대학의 진학정보, 학부모 교육용 콘텐츠, 창의적 체험 활동용 콘텐츠 (자율활동 지원, 봉사활동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진로활동 지원, 독서활동 지원, 방화후활동 지원 콘텐츠 등), 자녀 상담기법 콘텐츠, 적성 심리검사 콘텐츠, 진로진학 컨설팅 콘텐츠 등
 - ※ 학부모를 위한 웹메일 서비스 구축: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지원용 학습지원시스템 솔루션을 개발·배포한다.

□ 《실천과제 5》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 교육 - 고용을 연계한 맞춤형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 직업전문 고등학교의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한다. 모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균형 있는 지원을 시행하며 고용전망이 밝고, 교육만족도가 높은 전공 분야에 추가 지원한다. 특성화고교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육 담당 상담교사를 1-2명씩 추가 배치하여 진로컨설팅, 진학컨설팅, 학습컨설팅을 밀접하게 연계시킨 삼각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 일정 규모 이상 직장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휴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재직자, 재직경력자를 위한 전문대·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 전공별 취업준비교육 확대, 졸업생 취업률, 취업유지율, 교육만족도 등 주요 교

육성과 관련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학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특성화고 - 전문대학 - 지역산업 간 연계·협력 체제를 통한 직업교육을 선진화한다.

- 우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EBS 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개방한다.
- 마이스터고 선정 관련 산업 분야를 새로운 성장분야, 특히 지역이 새롭게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로 확대·다양화한다. 마이스터고의 '졸업 이후 경력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반여건을 조성한다.

정책 4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수준(GDP 대비 1%)으로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 30% 인하

- 향후 5년 동안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GDP대비 1%)으로 확대한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충한 고등교육 재정의 60% 이상을 대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투자한다.
- 향후 5년 동안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30% 이하하며 경과기간 중에는 서민·중산층 대학생부터 등록금 부담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전액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서민층의 장학금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중산층 학생들을 위한 반액/성적/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 든든학자금(ICL) 대출이자율(2011년 1학기 현재, 4.9%)을 물가상승률 이하(2.5% 내외 수준)로 낮추어 대출이자율을 사실상 제로화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기간의 이자는 면제한다.
- 향후 5년 동안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이에 맞춘 전임교원 충원률 100%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 시간강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제도를 '강의연구교수'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특히,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의 비정년 교원의 보수를 정년계열 교원 보수의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실천과제 2》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 대입제도의 타당성·공정성 제고, 형평성 실현

-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우선 수시전형을 단순화한다. 수시전형 유형을 모집단위 계열과 전형 유형별로 크게 구분한다.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내신)중심형과 사회적배려형(적극적차별형) 중 일부를 전형에 적용하고, 특징별로 단순화하여 종류를 대폭 축소한다.
- 현재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대학 입학사정관제 비율을 제한·축소한다. 적정 비율을 한 학교당 10-15% 이내로 제한하고, 전면적 전형 아닌 ‘특별전형’, ‘부분전형’으로 전환한다.
- 입학사정관제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대책’으로 전환하여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정착시키고, 최대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전형’으로 전환한다.
- 계열·모집단위별 대입전형을 특성화한다. 전공별(모집단위별)로 내신·수능 반영 선수과목을 공시하고, 공시된 내신·수능 과목점수만 전형에 반영한다. 대학 모집단위별 전형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입전형특성화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적극 지원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지역별 기관단위, 사업단위, 학생단위 지원을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 기관단위로 지역별 지방거점대학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대규모로 지원한다. 지방 국공립대와 지역별 거점대학 등록금은 단계적으로 현재 국립대 등록금 수준보다 50% 이하로 인하한다.
- 사업단위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연구프로그램들에 대해 대규모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연구프로그램은 지역산학연 협의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한다.
- 지역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내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이후에 해당 지역 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 유인을 제공한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 보장체제의 정립

- 정보공시를 수요자 친화적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보장: 자체평가時에도 대학내 학과별 평가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학교 내 학과 단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부평가에 있어서 인증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정부는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평가에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유인을 강화한다. 재정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견지되도록 한다.
- 정부는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평가, 재정지원 방식이라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립대학교 퇴출 시스템을 마련한다.

□ 《실천과제 3》 대학생 포털(EBS_u) 구축으로 구직 사교육비 제거 및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명문대학 교육콘텐츠의 개방

- 현재 운영중인 수능사이트 EBSi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학생 학습 지원 포털 사이트(EBS_u)를 설치·운영하여 대학생의 구직사교육비를 경감한다.
- 공무원시험 대비, 대학편입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유비쿼터스 학습 선도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유비쿼터스 학습 콘텐츠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여, EBS와 대학 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EBS 교육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다. 특히, 공통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다.
- 사범대, 교육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교사 임용시험 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유비쿼터스 학습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울대, 한국방송통신대, 카이스트 등 주요 국·공립대의 우수 강의를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민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콘텐츠와 이후 정부 지원으로 제작될 교육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여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유비쿼터스 학습 콘텐츠 공동활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콘텐츠 검색 및 공유를 위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수립한다.
-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학습 선도대학(5개 대학)을 선정하여 교육콘텐츠 개방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유러닝시범대학을 선정·운영한다.

□ 《실천과제 4》 모든 성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복지
국가 실현

-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대학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개발한다.
-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내 고용 - 복지체제와 연계한다.
- 일반 성인이 보다 자유롭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한다.
- 총리실 산하에 ‘실버학습통합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범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를 대비하여 중고령자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추진한다.
- 특히, ‘老老연결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강사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 영·유아 시기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전액 장학금 및 50% 장학금을 지원한다.
-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실제 고용으로 연계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실천과제 5》 생애단계별 맞춤형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

- 고등교육 분야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학습 세계 선도대학을 구축한다.
- 평생학습·직업능력개발 분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비쿼터스 학습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EBS 또는 산업인력공단 등을 활용한다.
-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학습지원법(가칭)’을 제정한다.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는 국가 유비쿼터스 학습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의 공유, 개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 《실천과제 1》 GDP 대비 국가 총 R&D 투자(정부+민간) 비중의 5% 수준 달성 유지

-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5% 연구개발투자를 달성하고 유지하여 과학기술 투자의 짧은 역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2020년까지 7대 과학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공공복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R&D투자 중 정부·공공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 민간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국내 R&D 투자가 GDP의 3.5%까지 확대되도록 유인한다. 대기업의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하고, 대학·중소기업 등과의 공동-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하고, 창업 5년 이내 기업 연구개발장려세제(R&D투자액의 일정부분 현금 환급)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

- 모방형 체제를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계적 과학기술 2012년까지 정부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35%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 50%까지 확충한다.
-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확보를 위해 개별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개인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011년 7,500억 원에서 2020년까지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 《실천과제 3》 향후 6년간 3.5조원의 투자를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 및 기초과학의 적극 육성

-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키고 세계의 재능있는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중이온 가속기를 비롯하여 첨단과학 연구의 기반이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설치한다.

○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을 2009년 11.3%에서 202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선진화한다.

□ 《실천과제 4》 정부R&D 투자 중 보건·환경·안전 등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

○ 정부 R&D 투자 중 삶의 질에 중요한 보건·환경 목적 비중을 2010년 18.5%에서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기여하는 고혈압·당뇨·암·심혈관계 질환 등 4대 성인병 치료, 바이오 장기 등을 이용한 재생의료 등 첨단 생명·보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성 질병 예방과 대응 및 AI, 구제역 등 동물전염성 질병의 완벽한 퇴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 쉰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하고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중장기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민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정부R&D 예산 중 재난·안전 분야 투자비중('09년 0.97%)을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 중 과학기술이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이슈나 국방에 필요한 기초연구에 대해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정책 6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고,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

□ 《실천과제 1》 미래형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 교육을 통한 초·중등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과학기술 흥미도 향상 유도

○ 수학·과학교육을 전문가 및 수요자와 재점검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는 교과교육이 되도록 한다.

- 대학교수, 학부모, 교사 등 각계 공동의 「수학·과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학·과학 교육을 점검하고, 분야별 배정이 아닌 학령에 적합한 실험과

개념 이해,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

- 과학관련 수업에 예술적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인재를 양성한다.

○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수학·과학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는 선진적 수학·과학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현장 및 실질적인 문제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 출연(연)·대학·학회 등과 연계한 수학·과학교사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학과학 교사들이 연구개발과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기 전문성을 강화한다.

- 과학관, 과학축전, 창의과학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에서 보다 쉽게 첨단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장을 확대하도록 한다.

□ 《실천과제 2》 대학의 특성화와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과학기술계의 우수인재 양성 보고로 발전

○ 대학의 역할과 분야를 특성화하고 우수대학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대학들을 육성한다.

-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과 중점 분야에 맞는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비율을 확대한다.

- 세계 100위권 대학 5개,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 2개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 학사조직,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육성·확산시킨다.

○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대학의 평가와 인증제도 강화 및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해 나간다.

□ 《실천과제 3》 미래의 기술수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기반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 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인력 양성시스템을 대학에 구축한다.

- 광역권 선도산업별 인력양성을 담당할 지방거점대학을 지정·육성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 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 연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공동연구센터(DRC)의 설치·운영을 통해 산·학·연 협력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미래의 기술수요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대학에 구축한다.

- 녹색, 에너지, 차세대모바일 등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과 특성화대학원을 선정·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을 개설한다.
- 공학, 경영학, 디자인학 등을 연계한 다학제 융합학과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공계 지식기반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을 강화해 나간다.

□ 《실천과제 4》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배양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 202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석학 및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WCU, WCI 등을 개선하고 적극 지원하여 해외 우수연구인력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연구자 및 신진인력들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초청 장학사업(GKS)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과정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졸업 후 인턴십, Post-Doc 연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

○ 외국의 우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교류하는 데 불편이 없는 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해외 연구자의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비자, 영주권 제도 등 외국인 연구자의 입국 및 이민제도를 개선한다.
- 우수 외국인 과학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생활상담센터를 확충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 해외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해외 우수 한인 과학기술인력정보 DB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제공하여 우수연구인력의 영입과 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해 나간다.

□ 《실천과제 5》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여성과학자, 원로과학자 등 잠재과학기술인의 활용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과기 교육, 경력 보호, 연구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간다.
 - WISE 여학생집중멘토링, 찾아가는 실험실, 출연(연) 연구실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우수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여성친화적인 공학교육을 확산해 나간다.
 -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후 복귀자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육아시설을 확대, 추진한다.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승진목표제와 파트타임 정규직제, 스마트 워크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과 주요 사업의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을 높인다.
- 과학기술자의 경험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한다.
 - 원로과학기술인이 평생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인재양성 및 국가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닥터 사업, ReSEAT 사업 등의 원로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 원로과학기술인과 여성과학기술인이 방과후학교, 과학기술해설사, 생활과학교실, 진로상담사 등 과학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실천과제 6》 과학기술인의 정년 연장과 PBS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연구환경의
선진화 및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 조성

- 성실히 연구에만 몰두하면 안정적 삶은 물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인 우대체제를 갖춘다.
 -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우수연구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70세까지 연장한다.
 -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정부요직 할당제 및 국회 진출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등 과학기술인 연금·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강화한다.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우수이공계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한다.
-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자 친화적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한다.
 - 출연(연)의 PBS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 및 기관 목적사업 예산의 자율성을 향상시킨다.
 -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 과학기술계인사의 정부요직 발탁, 국회진출 확대(비례대표 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중심의 정책 수립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장. 여성·가족·청소년 비전과 정책

남녀가 함께 가꾸는 행복,
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 차

I. 비 전

1. 현황진단
2. 비전
3. 정책방향
4. 추진전략

II. 분야별 정책과제

1. 여성

- 【정책 1】 여성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책 2】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책 3】 성평등 수준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정책 4】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 가족

- 【정책 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책 2】 든든한 자녀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책 3】 취약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3. 청소년

- 【정책 1】 청소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2】 청소년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3】 청소년의 사이버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4】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III. 분야별 정책과제 목록

제6장. 여성·가족·청소년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현황 진단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여성정책의 대상이 저소득, 복지중심에서 일반여성의 지위향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걸맞게 여성정책 추진 조직도 정무장관(제2)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5년에는 호주법이 폐지됨으로써 오랜 여성운동이 결실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여성계 공통 현안과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적 의제가 가족의제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여파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50%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성평등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선진국이 국가경쟁력과 성평등지수가 일치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양자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지수가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동시에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대표성,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해체문제에 대처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저출산현상의 심화, 여성취업의 확대, 돌봄위기 등 가족관련 의제가 사회적 핵심의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의 증가로 취약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증가 역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개인 행복의 원천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가족의 중요성,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취약가족 지원의 확대와 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며,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 가족기능의 약화 및 가족 해체 현상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는 가정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세대(청소년) 개발 전략 수립은 오늘의 행복과 함께 내일의 희망 사다리를 놓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새로운 비전

남녀가 함께 가꾸는 행복, 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여성가족정책의 비전은 ‘남녀가 함께 가꾸는 행복, 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한다. 정책분야별로 하위 비전은 다음과 같다.

○ 여성정책 : 여성,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 저출산현상의 심화로 2016년부터 인구의 실질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잠재적 경쟁력은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다. 여성들이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일자리, 대표성, 평등, 안전 등 4가지가 보장된 사회여야 한다.
- 첫째,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평생직업이 아닌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한다.**
- 둘째,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회여야 한다.**
- 셋째, 양성평등문화, 의식, 제도가 사회전반에 주류화되는 **성평등사회여야 한다.**
- 넷째,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한다.**

○ 가족정책 : 가족의 행복,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형성과 유지,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다음의 네가지 사회적 여건 조성이 곧 가족정책의 비전이자 정책방향이다.
- 첫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
- 둘째, **촉촉한 자녀양육지원체계 구축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 셋째,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가족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넷째,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인식 개선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 등이다.

○ 청소년정책 : 청소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

-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려고 한다.
- 첫째, 청소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의 사다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학습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생활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자기주도생활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 둘째, 청소년 복지 강화를 위한 ‘행복의 사다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사회적 격차로 인한 기회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청소년기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며, 누구나 자유롭게 꿈을 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행복한 미래를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 셋째, 청소년 사이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사다리’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반면, 그 안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중독 증상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가상과 현실의 괴리감 등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게임의 몰입으로 인한 게임 중독 현상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맞춤형 치료체계(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 개발을 통해 건강한 사이버 문화 정착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넷째,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의 사다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통합조정 기능의 확대 및 청소년정책의 행정전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을 통한 지원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차원의 재원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정책방향

- 여성가족정책의 3가지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정책 지향성을 갖는다.
 - 둘째, 기존의 기능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에서 수요자 관점의 통합적인 맞춤형 정책과 지원의 방향을 추구한다.
 - 셋째, 여성가족정책의 대상자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생활밀착형정책 시행을 위해 지역을 단위로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추구한다.

4. 추진전략

- 여성가족정책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3가지이다.
 - 첫째, 서로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화합을 이루는 공감정책(공감)을 지향한다.
 - 둘째, 개개인에게 감동을 주는 눈높이 생활체감형 맞춤형정책(감동)을 지향한다.
 - 셋째,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고 동반자가 되어 평등을 구현하는 남녀 함께 동행정책(동행)을 지향한다.

○ 추진전략별 정책과제(전체 27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p>소통 융합의 공감정책 (10개 과제)</p>	<p>여-2. 농촌여성 행복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가1.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가2.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가3.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가5. 이웃과 소통하고 분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형 자녀돌봄 지원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3.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연계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청-6. 부처별 청소년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청소년개발지원공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7. ‘청소년정책 지원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청-8.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를 설치하겠습니다.</p>
<p>계층별 대상별 맞춤형 공동정책 (12개 과제)</p>	<p>여-1.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여-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8.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가4.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녀양육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가6. 부모에게 힘이 되는 ‘부모(역할)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가7. 한부모 조손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위기가족SOS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가8. 이혼과정 및 사후에 자녀의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9. 다문화자녀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청-1.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생활역량프로그램 ‘을 실시하겠습니다. 청-2. 청소년의 성장 지원(컨설팅)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커리어 개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청-4. 지역의 탈학교, 부등교 청소년을 위한 ‘자퇴숙려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청-5.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그린사이버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p>
<p>남녀평등 동행정책 (5개 과제)</p>	<p>여-4. 선출직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겠습니다. 여-5. 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직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6. 국가 성평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7. 양성평등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여-9.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루겠습니다.</p>

여성가족정책의 비전 및 정책 방향

비 전

남녀가 함께 가꾸는 행복, 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분야별
비전

여성,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가족의 행복,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청소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3대
추진전략

공 감

여성·가족의
행복

감 동

동 행

II. 정책과제

1. 여성

정책 1 여성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연령별 여성고용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여성고용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달성도를 조사하여 개선안과 함께 발표하도록 한다.

10대 청소년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중 대표 수련관을 선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센터 ‘틴틴플라자’(16개 시·도에 1개소 설치)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진로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멘토-멘티시스템 운영하며, 진로교육 담당교사 교육을 통한 학교(초·중·고)의 직업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on-off 라인 진로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 진로 및 직업 지도를 활성화한다. 기존의 관련 사업(두드림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20대 청년 여성

- 커리어상담기관 ‘커리어-업그레이드센터’를 설치하여 20대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경력개발 유지, 리더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한다. 즉, ‘직업훈련-취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지역별 특화산업과 여성유망직종 발굴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실행하고, 사업서비스업 분야, 녹색 일자리 분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한다.
-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확대를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AI-WISET) 중심으로 우수한 여학생의 과학기술친화력을 높이고, 여성과학기술인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인 여성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며,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

대학 지원 사업, 산업 현장에 필요한 멀티 플레이어형 여성공학인력 양성, 여성공학기술인력 대학원생 리더십 제고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제고 및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을 실시한다.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평가항목에 재직여성 직무훈련 참여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직종별 성별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속적 지원과 여성비율을 확대해 나간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훈련수요에 부응한 실업자 훈련 실시하며, 지역전략산업 수요인력 및 훈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들 사업에 20대 청년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지정하여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기관 측정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 점검한다.

3·40대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 전업주부를 위한 직장복귀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주부 취업상담을 확대하며,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과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주부 단기 적응훈련)하고,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및 파트타임 직종을 개발하여 20대 청년여성과 4·50대 중년여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감, 지역사회의 산업구조에 부응하도록 기능을 확대, 조정해 나간다.
- 여성취업이 쉬운 직종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가사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직종에 근로자성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기업 등의 방법을 통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제도화한다.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참여가 저조한 직종 중 일부 직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훈련을 실시한다. 시범 훈련 후 확대, 보급하여 여성의 직업 영역을 확대하고, 기계장비, 건설, 전기 등 여성참여비율이 저조한 훈련직종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친여성적 기업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가사지원, 육아지원, 간병 등 분야별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적 기업육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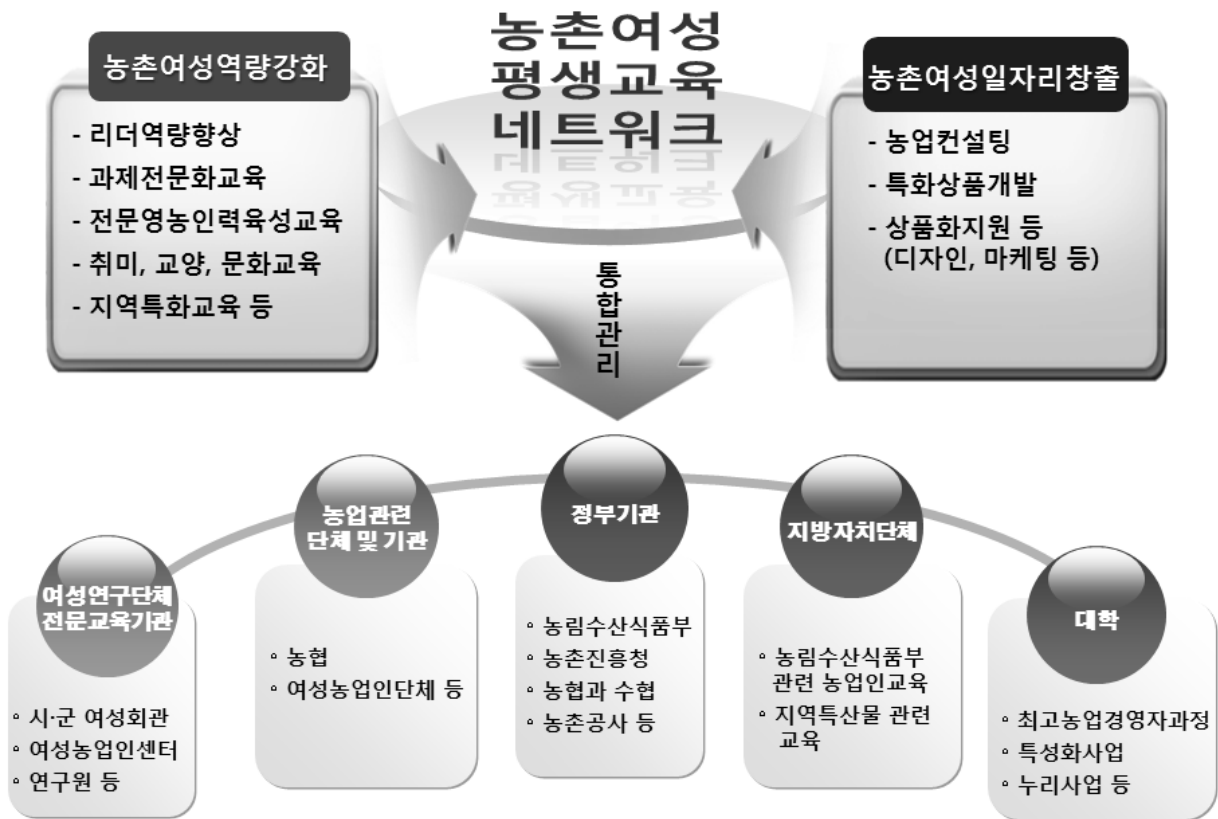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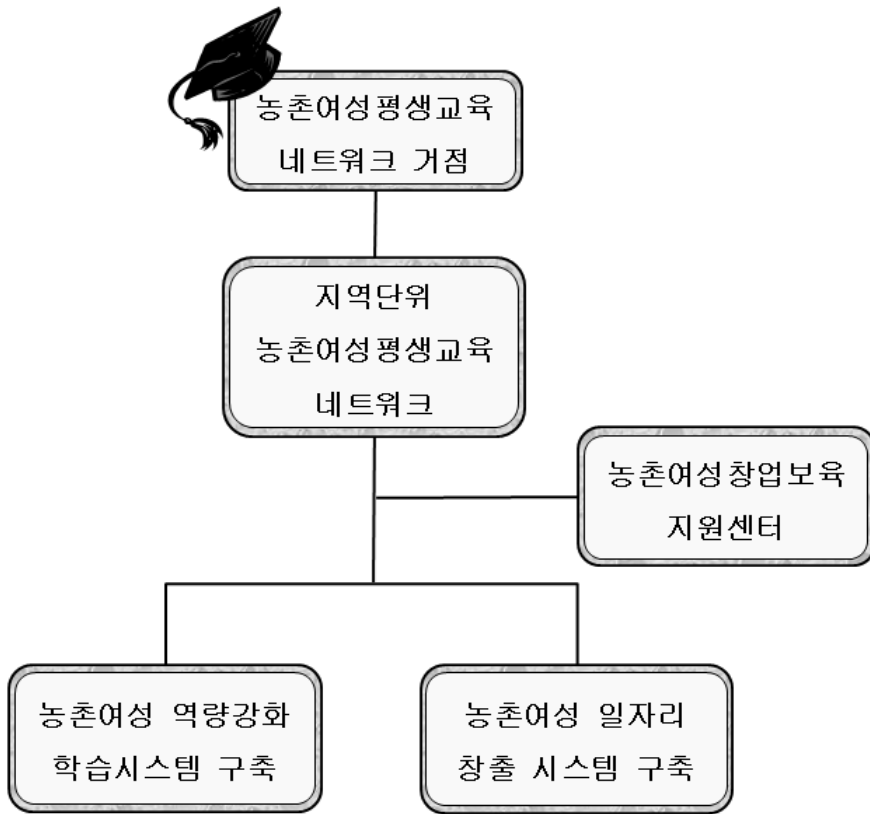
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여성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훈련과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사회적 기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4·50대 중년 여성

- 4·50대의 재취업 희망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취업이 용이한 분야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나아가 여성특화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차원에서 창출한다.
- 여성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창업훈련 체계화하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 여성비즈니스센터를 전환하여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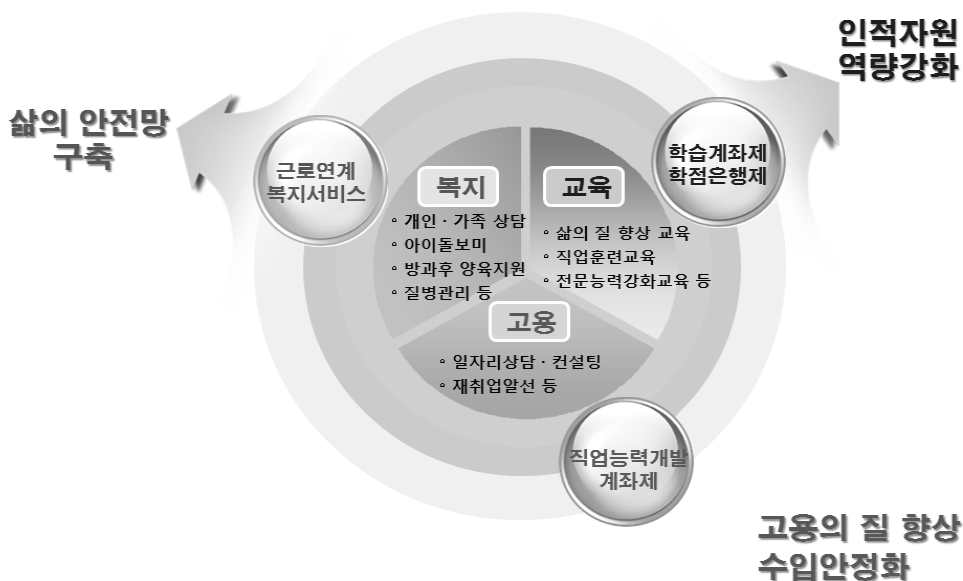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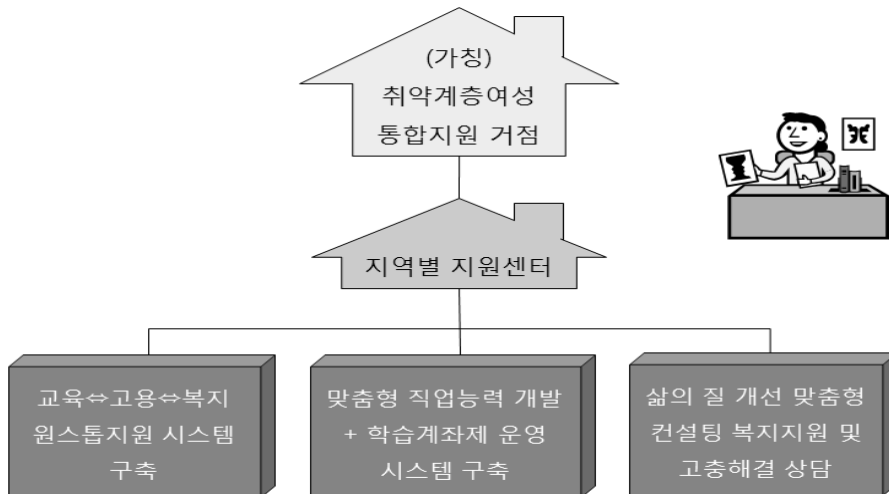
60대 노년 여성

- 노년여성들이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 적성, 진로설계를 진단받을 수 있는 커리어 코칭제도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거점기관 지정하고 운영한다. 여성직업훈련기관이나 노인복지관 가운데 공모하여 선정한다.
 - 고령자를 위한 단기 적응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1개월 이내의 단기과정을 늘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직종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이나 NGO 등에서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적응력을 높인다.
- 《실천과제 2》 농촌여성 행복지원 프로젝트 실시
- 농촌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농촌일자리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농촌여성 평생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별적·과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여성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여 통합관리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촌여성의 학습을 관리하고 이를 농촌경쟁력으로 연결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 자발적 학습공동체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생산물의 상품화 → 상품지속개발 → 상품화 지원이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농촌여성 창업보육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농촌의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실천과제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 실현

- 각 지역마다 취약계층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각 지역의 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통합운영의 방향을 지휘 할 중앙거점을 마련한다.
-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원스톱(교육 ↔ 고용 ↔ 복지) 지원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한다.
- 직업훈련으로 받는 학습은 평생학습계좌에 등록하여 학점인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된 학점이 모여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확대 운영하여 구직등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정책 2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선출직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현재 정당법상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한다.
- 제도적 의무사항(여성후보 30% 공천)을 지킨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30%를 추가 지원한다.
 - ※ 현재는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이라 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30-15%/ 15-5%/ 5%이하) 하고 있다.
- 공천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여성대표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여성 공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한다.

□ 《실천과제 2》 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직 여성 할당제 실시

- 여성비율이 10% 이하인 1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직에 대해 직급여성할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 공기업 평가 항목에 여성임원 지표 포함하고, 민간기업 대상 CEO 포럼 및 여직원 능력향상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30%의 여성위원 참여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업무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 정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정책지표로 여교수 비율을 삼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의 임용목표제와 관련하여 대학 평가와 연계하고 우수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책 3 성평등 수준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국가 성평등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 성평등 정책과 국제 성평등지수간의 연계 지표를 개발한다.
- 국가 성평등지표 콘트롤 타워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서를 설치하여 기능을 부여한다. 국가성평등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국가 성평등정책의 국민 체감도 증진을 위한 전국적인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양성평등 예산제도 적극 시행

-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수혜가 양성 모두에게 공정한 정책 산출이 되도록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성별 영향평가 참여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정책개선 우수사례 대국민 홍보 강화, 성별영향평가 관련 네트워크 강화로 정책 내실화를 기한다.
- 국가 성인지 통계를 지정, 기존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활성화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하고 및 컨설팅하는 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정보 DB를 구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책 4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여성건강증진센터(Women's Health Center) 설치

- 여성건강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젠더적 관점의 여성건강 지표 작성 및 조사, 연례 여성건강 보고서 발표, 연도별 여성건강 이슈 발표, 여성의 생애주기별건강정보 포털 제공, 각종 여성건강 캠페인 및 인식개선 행사, 공공 및 비영리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내 여성건강국(현재는 가족건강과)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여성건강 정책 조정, 실행 평가의 기능하고,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지도, 감독하도록 한다. 그리고 권역별 여성건강증진센터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 《실천과제 2》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안전한 지역사회 아동안전지도 작성,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제도 도입, 성폭력 피해 지역사회 기관 연계망 강화, 지역사회 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등의 지역사회 중심의 성폭력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인증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인증제를 도입한다.

2. 가족

정책 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

-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의 정액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복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줄인다.
- 은퇴예정자, 유사직종 및 업무경험 경력단절자 등을 활용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필요 기관에 파견하는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기청, 조달청의 입찰 가산점 등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가족친화기업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패밀리데이(Family Day)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가족친화포럼을 운영하여 공감대 형성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 《실천과제 2》 남성 육아 참여 여건 마련

-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즉 소득대체율을 개선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가 권장되고 지원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기간에 남성의 휴직기간 60일을 추가 부여하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을 강구한다.
- 아버지교육을 확대하여 남성들이 아버지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과제 3》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

-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모델을 발굴, 개발하고 민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킨다.
- 단시간 근로제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정부의 규제와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조정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근무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킨다.
- 유연근무제나 단시간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복지혜택, 업무평가, 승진 등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정책 2 든든한 자녀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자녀양육 부담 감소

- 보육료(유치원이용료) 전액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한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대상아동의 연령, 소득계층 범주, 수당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시설 중심의 자녀양육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부모의 다양한 양육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와 같은 재가과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정서와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가정내에서 영아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베이비시터 등 민간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비영리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안정된 제도 운영을 위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실천과제 2》 지역사회 공동체형 자녀돌봄지원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 돌봄

을 위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뱅크나 마일리지제도 등과 연계한다.

- 지역사회내 돌봄 자원과 관련 정보를 발굴,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돌봄자원 발굴단 또는 '마을돌봄지킴이'를 구성하며, 지역내 돌봄지원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 《실천과제 3》 부모역할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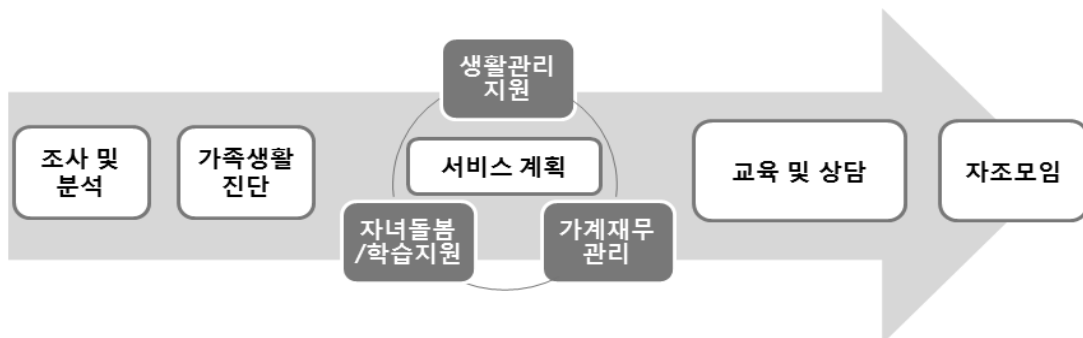
-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역할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부모역할 웹센터(Raising Children Network:Parenting Website)를 구축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정보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차원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 중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와도 연계한다.

정책 3 취약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위기가족SOS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위기가족 SOS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초기지원이 중요하므로 법원과의 연계 구축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양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파견서비스(아이돌보미 등)를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 모델〉



□ 《실천과제 2》 이혼과정 및 사후 자녀양육 책임 강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 상담이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돕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법원과 지역사회내 가족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이혼 시 소득과 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전(前)배우자 소재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다양한 강제조치를 마련한다. 양육비 미집행 시 우선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청구하는 대지급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청구이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前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정책 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다문화자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시행한다. 자녀에게는 연령별 기초학습 능력 및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한다.
- 중도 입국한 동반자녀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중도입국 동반자녀,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다문화 자녀를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 부모나라의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등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실천과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처가 지정한 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인정하고, 강사 양성 및 교재 개발 사업과 한국어 교육 시행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한국어 강사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재교육을 실시한다.
- 장기적으로 관련 부처 공동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증기구를 설립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 한국사회·문화이해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며, 한국어교육 대상을 위해 개인별 한국어교육과정 계좌제를 마련한다.

- 다문화가족이 생활에서 접하는 의사, 약사, 보육교사, 경찰관, 은행원,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을 국내 전문인력 교육 전반에 대해 의무화한다.

3. 청소년

정책 1	청소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 《실천과제 1》 자기주도생활역량 프로그램 실시

- 자기주도생활역량(동기강화, 학습역량, 생활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과정을 개설하여 민간자격증 과정으로 운영한다.

□ 《실천과제 2》 청소년커리어개발센터운영

- 지역의 청소년(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한다. 부모의 역할 중 경력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한다.

정책 2	청소년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

□ 《실천과제 1》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계시스템의 개선

-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사회안전망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동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각각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CYS-net과 교육과 학기술부의 Wee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을 피하고 다음 단계의 상담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이력제도를 도입한다.
- 청소년 사회안전망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실천과제 2》 자퇴숙려제도 실시

- 자퇴 의사가 확인되거나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경우 학교로부터 격리(숙려 기간)하여 지역에서 맞춤형 교육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퇴 숙려제도를 시행한다.
- 충동적 자퇴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탈학교 이후의 삶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퇴 이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정책 3 청소년의 사이버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그린사이버프로젝트 시행

- 초기 중독증상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각한 중독 단계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을 실시한다.
- 사이버를 통한 학습, 활동, 교류 등 긍정적인 활용을 위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도전과제를 개발하고, 부모 교육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그린사이버 프로젝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가능한 대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4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청소년개발지원사업단 운영

-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개발지원사업단을 신설한다.
- 청소년정책지원사업단 운영을 위해 청소년정책사업지원단의 목적과 역할, 조직, 규모, 부처간 협력방안 등이 명시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실천과제 2》 청소년정책 지원 서포터즈 운영

-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리모델링하거나 청소년 분야 이외의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지원 서포터즈를 구성한다.

- 지역별 청소년진로 개발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이외의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별 특색있는 영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및 조기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 《실천과제 3》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 설치

- 정부의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다양한 청소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직간접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통해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를 설치한다. 기부금은 주로 지속가능한 청소년사업 즉, 청소년 학교 밖 교육지원 및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진로개발, 청소년 자립지원, 가출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며, 특히 청소년의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데 적극 활용한다.
-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 운영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기업의 세제 혜택 및 개인의 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로써 모여진 기부금은 창의적이고 역량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희망찬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강조하며,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의 목적과 역할, 세제 혜택, 사무국 조직과 규모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 청소년희망공동모금회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인사가 대표로 참여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7장. 환경·에너지 비전과 정책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안보의 구현으로
환경·에너지 강국 실현

목 차

I. 비 전

1. 대내·외적 여건
2. 기존 정책 평가
 - 현 정부 정책 평가
 - 야당의 정책 평가
3. 새로운 비전
 - 비전설정
 - 정책방향

II. 정책과제

1. 환 경

- 【정책 1】 4대강살리기의 성공적 완수로 물관리 모범국기를 구현 하겠습니다.
- 【정책 2】 세계적인 물기업 10개 육성을 통해 7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 【정책 3】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정책 4】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2. 에너지·자원

- 【정책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 하겠습니다.
- 【정책 2】 에너지 분야의 수출산업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정책 3】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정책 4】 에너지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제7장. 환경·에너지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대내·외적 여건

-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과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보,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가간 경쟁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新고유가시대가 도래하였고,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자원의 국유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 중심의 R&D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시장 선점,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 또한 대내적으로 쾌적하고 품격 높은 국토환경,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에너지 감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다.
-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에너지원별 수입 국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매우 취약하다.
-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지할 경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BAU)에 비해 30% 줄이기로 했다. GDP에서 제조업 및 에너지 多소비업종(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성장의 여지가 크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2. 기존 정책 평가

□ 현 정부의 정책 평가

-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이의 구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며, 자원생산과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결핍과 불편이 아닌 풍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탐사중심의 자원개발에서 생산·운영·광구 인수로의 전략적 전환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다나社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형 원전의 UAE 수출 또한 에너지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 그러나 4대강 사업 등을 통하여 얻은 선진 물관리 노하우를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물환경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 해외진출로 연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60%에 머물러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책선진화의 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 녹색성장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정부의 주도과 정책적 뒷받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모두와 민간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체계를 정비하고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및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절히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야당의 정책 평가

-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야당은, 현 정부의 물환경 정책이 환경보호가 아닌 생태파괴적이며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스마트 성장에 反하는 정책으로 간주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는 자연습지의 훼손 등 생태파괴적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외면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 야당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본류를 정비하여 충분한 통수능력의 확보로 홍수와 물부족에 대비하고 지역적 수자원의 확보와 근본적 수질개선, 순차적 지천의 정비 등을 통한 선순환적 하천정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스마

트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국토면적의 70%를 차지하고 국민의 78%가 거주하는 4대강 주변의 수생태의 복원과 녹색성장의 인프라 구축 등 국토재창조를 위한 4대강 살리기를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으로 폄훼하고 있다.

- 에너지자원분야의 평가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며 에너지의 절약과 수요관리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은 지역단위의 에너지 대책을 강조한다.
- 야당의 공급위주정책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정책적 지향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공급위주의 정책을, 민주당은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가 중복되거나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3. 새로운 비전

□ 비전 설정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안보의 구현으로 환경·에너지강국 실현**

-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국토를 조성하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와 그린에너지로 신에너지강국을 실현한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된 계층의 에너지복지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정책 방향

-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 기후변화시대의 대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다.
 - 나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대책으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된 취수원을 확보하며, 황폐화된 하천의 수계생태공간을 복원하는 등 열악한 국토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토의 대개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건강한 수계생태와 대기질의 향유가 가능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건설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은 물론 국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물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출을 통한 해외 물시장의 선점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 가능하다.

○ 녹색성장의 지속적 추진과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나아가 수출을 통한 녹색경제강국을 이룰 수 있다.
- 특히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쏠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산업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기업이 탄생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 응용분야의 선점과 함께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비롯한 신기술 등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매우 높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폐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자원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물순환과 자원·에너지순환에 기초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입할 수 있다.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복지의 구현을 위한 노력

-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이 중요하다.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효과를 높이고, 국제가격변동에 따른 국가경제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과 에너지 복지의 구현도 시급하다. 에너지의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세금구조 하에서 오히려 서민층 主소비연료의 상대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지원별, 소득계층별 상대가격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II. 정책과제

1. 환경

정책 1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완수로 물관리 모범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블루인프라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물강국 실현

- 4대강 살리기를 통하여 홍수 저류 공간을 16억톤 이상으로 확대하며, 도시침수 방지시스템을 강화하여 침수빈발지역에 대하여 하천과 도시를 연계한 종합침수 대책을 실시한다.
- 광역상수도간, 광역-지방상수도 연결로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 실용화기술을 확보하며, 현재 54%인 공업용수의 재이용률과 11%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각각 60%와 20% 이상으로 높인다.
- 4대강 살리기로 930km에 달하는 생태하천 조성과 86% 이상의 좋은 물 공급을 달성하며, 선진화된 IT 기반의 24시간 실시간 수질예측모델링을 가동하여 수질사고 및 오염저감을 위한 선제적 수질관리를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4대강 살리기 해외진출 추진

- 4대강 살리기는 물관리에 관한 토탈솔루션(이수+치수+환경+생태+문화+관광) 사업이다. 1,700km의 공사구간과 대규모 생태하천과 인공습지 조성 등 세계 최대 테스트베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여름철 집중호우의 불리한 자연여건 극복 등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종합 물관리사업의 전개가 활발한 개도국 중심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세계 물포럼과 국제세미나 등 국제행사 유치 및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 국가별 맞춤형 단계별 접근으로 기초사업과 본 사업, 종합사업 등 차별화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 《실천과제 3》 친수법 적용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생태공간의 복원

- 4대강 살리기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친수구역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특별법의 적용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개발을 주도하고 이익을 회수하여 하천관리 등 공익에 투자한다.

- 친수법의 적용과 수변공간의 개발은 수변 특성을 살리고 자연친화적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지향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 사용으로 탄소배출과 교통수요 발생을 줄이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을 지향하며, 지역에 적합한 친수구역 개발모형을 정립한다.
- 친환경적 도시생태공간의 복원과 함께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계천+20’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생태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 ※ ‘청계천+20’ 프로젝트 : 도심의 건천과 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여 수질 개선 및 친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0개소는 설계 또는 공사 중이며 10개소는 기본 계획 수립 중
(예. 대전시 대전천, 전주시 노송천, 밀양시 해천, 부산시 초량천 등)

정책 2	세계적인 물산업기업 10개를 육성하여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 《실천과제 1》 10개 글로벌 물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의 본격화

- 브라질의 Sabesp, 이탈리아의 Acea 등 공기업의 글로벌 물기업 육성과 프랑스의 Veolia와 Suez 등 민간기업의 세계 1, 2위 물기업 육성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물전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 26조원(2010년 시장규모는 12조원)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물산업시장을 고려, 관련 일자리 약 70만개를 창출한다.
- 특히 현재까지 구축된 상수도, 하수도, 4대강 물관리기술 등을 바탕으로 물관리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관리 토탈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공기업의 물관리 운영능력과 민간기업의 제조·건설경쟁력의 결합을 통한 물환경 관련 제조·건설분야 및 상·하수도의 해외 동반진출을 추구한다.
- 아울러 상수·정수·하수·폐수처리설비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EPC(건설), OM(운영), PD(프로젝트 발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망라하는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연관산업인 상·하수도의 부품과 재료를 망라한 기자재 분야와 동반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자재 품질기준 강화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 《실천과제 2》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한 물산업 기반 확보

-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기업,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처리 기술과 생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관리기술의 개발을 주도한다.

□ 《실천과제 3》 수도사업의 광역관리체제로의 개편

-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한 국가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을 조속히 통합 운영,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면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20%이상 향상 및 年평균 3천만 m^3 이상의 300억원에 달하는 누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 《실천과제 4》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기존 댐관리체제의 변화

- 물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자원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제반 기본원칙과 물관리 거버넌스, 통합물관리계획 등을 포괄하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지향하여 기존의 물관리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 물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
- 이와 함께 1995년과 99년 등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된 수력댐의 다목적댐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시 용수공급량 4.6억 m^3 과 홍수조절용량 2억 m^3 의 추가 확보가 예상되며,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효과가 큰 한강수계의 수력댐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을 실시한다.

정책 3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도시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출

- 생물서식과 홍수저감, 수자원 확보, 물순환체계 등을 고려한 도시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빗물침투형 가로공간, 물순환형 도시습지, 생물서식이 가능한 우수지 등 다기능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시녹지공간 창출 및 연

결성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열섬완화, 대기질과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한다.

- 도시숲과 비오톱, 공원 등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기존 녹지와 연계하여 도시 생태축을 조성하는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도시내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광역생태축과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고, 도시내 생태공간을 보전, 복원하여 쾌적한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

※ 비오톱(biotope) :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화단 등을 통칭하며 도심의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실천과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기개선추진과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 대도시와 공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도시는 기후 변화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질이 유지되도록 기후변화 대책과 통합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동시저감을 추진한다. 나아가 용도지역별 대기배출시설의 입지규제 및 배출부과금 제도 등을 개선한다.
-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등 그린카 보급활성화 및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등으로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등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나아가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에 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을 집중 도입, 위해성이 높은 비산먼지를 저감한다.

□ 《실천과제 3》 인체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추진

-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매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혹서 및 혹한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성이 높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한다.
- 아토피 등 환경질환의 제거를 위한 태아(산모)부터 학령기까지 유해물질 노출영향조사 및 환경보건생활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새집·헌집의 증후군 제거를 위한 실내 환경의 개선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성 질환의 주요 발생지역인 폐광, 산단 주변, 환경사고지역 등 환경취약지역에 예방우선정책을 강화한다.

□ 《실천과제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 환경분야 녹색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녹색산업 핵심기술의 상용화와 실용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IT, BT, NT를 조화한 시장지향적 녹색환경기술을 개발하여 녹색산업 수출강국으로 거듭난다.
- 환경오염처리장치 위주의 수출에서 4대강 사업에서 개발된 물관리기술과 청계천 살리기에서 개발된 하천복원 기술, 매립지 열병합 발전 등 친환경 녹색기술 등으로 수출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 녹색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국, 동유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환경부문 산업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 《실천과제 2》 환경산업과 환경서비스 연계를 통한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 매립지재이용을 통한 항구적 매립지 문제의 해소와 함께 녹색에너지 공급기지로 구축한다. 즉, 재이용 매립지를 건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화와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의 조성과 함께 환경명소로 변경한다.
- 쓰레기매립장을 생명복원장으로 변화시켜 인근지역의 환경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녹색거점으로 가꾼다. 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에서 최종 자원화까지 획기적 관리개선으로 국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제고한다.

□ 《실천과제 3》 환경기술과 자원순환기술의 접목을 통해 녹색경제 기반조성과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 기후변화, 자원위기, 생태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토, 도시, 사회, 산업, 생활 등 분야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이용을 극대화하는 등 녹색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나아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 수요에 맞추어 자원화하여 지역단위 자원순환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다. 이러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조성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동시에 자원절약을 통한 지속가능 저탄소 녹색국가 건설에도 기여토록 한다.

○ 구축된 환경인프라를 기반으로 환경분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녹색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자연환경안내인, 하천환경해설사, 녹색조성 및 관리자 등 사회적 실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 《실천과제 4》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 녹색성장 선도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과 실천을 위해 생활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상별 맞춤형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도 강화한다.

○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녹색정책의 발굴을 통해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적인 환경모범국가로 거듭나고, 이를 위하여 지역별·양자간 환경 협력을 강화하여 황사, 산성비, 저탄소 사회구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녹색환경기술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에너지·자원

정책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기반 마련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이중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목표관리제 시행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사이에 일정한 시차를 인정하도록 한다.
 - ※ 에너지목표관리제 :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 패널티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제도. 2012년부터 시행 예정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실시할 예정
-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해외 CDM 사업 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은행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한다.
 -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의무감축국이 비의무감축국에게 기술과 자본을 제공 후 감축실적을 획득(보장)하는 체제

□ 《실천과제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에서 자동차연비제도 개선, 산업부문에서 목표관리제 시행, 건물부문에서 절약형 건물 인센티브, 가정부문에서 에너지프론티어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한다.
- 에너지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형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전기·물 사용 절약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한다.

□ 《실천과제 3》 신·재생,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자력안전 위원회 설치

-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공급의 무화제도(RPS)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예컨대, 환경친화적인 태양광 주택설비에 대한 지원 등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기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선다.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도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2년부터 도입 예정

- 정부는 원전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발전설비의 41%까지 확대할 계획 속에 현재 8기를 건설 중이며, 추가로 11기를 건설할 예정인 바, 원전설비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한다.
-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기존 원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를 설치한다.

정책 2 에너지 분야의 수출산업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외진출능력을 가진 대기업과 부품공급 가능한 중소기업간 상생전략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잠재력을 극대화, 시장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불필요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신규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 《실천과제 2》 스마트그리드 단지의 조기 구축 및 실용화 선도

-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완공한다.
-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서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시간 전력요금제, 각 분야 이해당사자(전력, 통신, 가전, 자동차 분야)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한국의 사업경험을 외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현재의 MEF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한다.

※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

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우리나라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스마트그리드 기술로드맵’을 완성

□ 《실천과제 3》 원자력 수출 가속화 및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 원전 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함께 한국형 원전패키지를 만들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 포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4년 3월 만료)의 개정과 고순도 플루토늄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공법을 재처리 기술로 허용받을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 현재 고준위 폐기물은 각 발전소 임시창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몇년내 저장소의 포화 예정(고리: 2016년, 월성: 2017년 등)

정책 3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한국형 브랜드 창출

- 경쟁국들에 비해 부족한 자금·기술력을 ‘우리만의 해외자원개발 브랜드 창출’(한국형 브랜드), 곧 경제개발 경험전수 및 현지고용을 결합한 우리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극복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기업이 진출하면 현지 주민이 고용되며, 성공적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트레이드마크로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자원개발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의 맞춤형 동반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수력자원과 구리가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한국의 대표적 에너지·제련 기업인 한국전력공사, LS니꼬 등이 동반 진출하여 전력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제련기업이 활용한다면 해외자원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실천과제 2》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확충

-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사업’, ‘산유국 정부나 국제트레이더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LNG 저장비율 확대 및 중기 도입계약의 연장, 스팟물량 확보를 통한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한다.

정책 3 에너지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전력산업의 시장기능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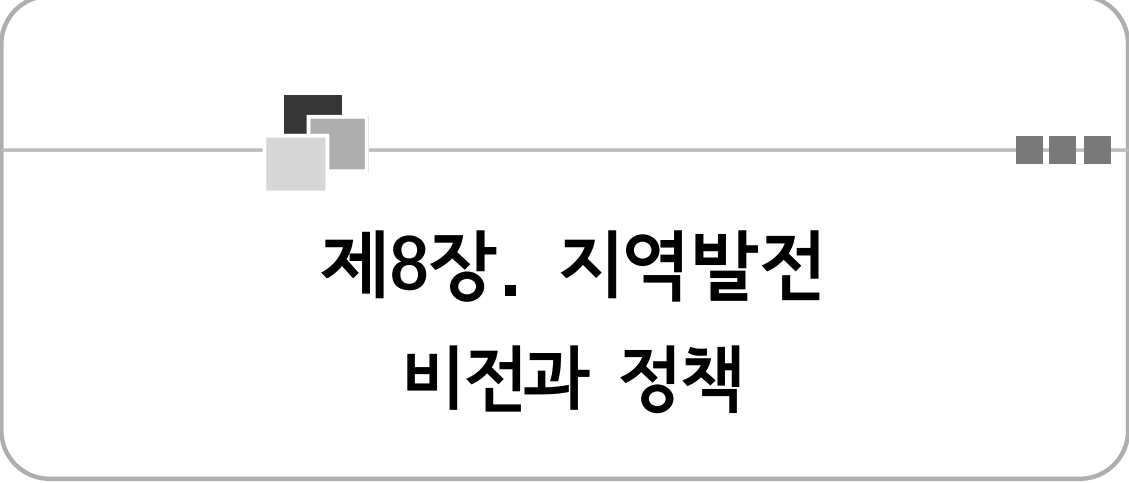
- 전력산업내 경쟁 강화와 효율 증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같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판매경쟁을 도입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에너지가격의 시장 기능 강화

-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추진에 힘쓴다. 특히, 천연가스 원료비의 계절적 차등요금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가스요금의 용도간 교차보조를 축소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실천과제 3》 더불어 사는 에너지 복지사회 구현

- 기존의 가격할인 지원방식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지원으로 대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쿠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 각각의 사업주체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한다.
- 등유와 프로판의 소비세 인하 등 저소득층 주연료의 상대가격이 높지 않도록 배려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장.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

광역경제권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

목 차

I. 비 전

1. 현황진단

2. 기존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3.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II. 정책과제

【정책 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2】 지역녹색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3】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정책 4】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를 연계하여 성장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5】 4대강 친수구역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6】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제8장. 지역발전_비전과 정책

I. 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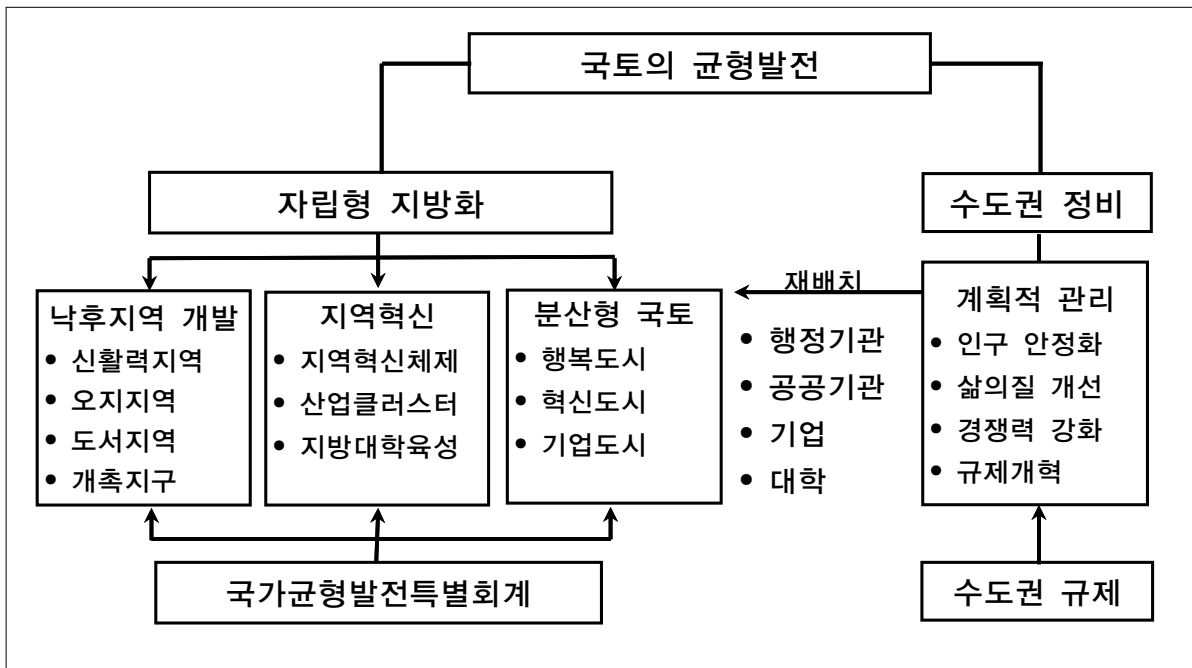
1. 현황 진단

- 세계화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세계 경제경쟁의 주체로 ‘지역’이 새롭게 부상했다. 국가의 경쟁력은 단일 주체로서 국가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국가 내 여러 지역들의 개별적 경쟁력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국가는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체보다는 지역 단위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지식이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이 창출되고 활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은 아이디어의 창출, 혁신 등에 좌우되며 중심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지역으로 퍼지는 네트워크형 경제가 구축되면서 지역 전체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지금 디자인, 마케팅, 아이디어 등 지식기반, 기술기반 그리고 글로벌로 통합된 혁신적 지식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 지역간 격차가 상존하며 지역격차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非양립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구도는 타당하지 않다.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은 2000년대 이후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지식기반구조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역대정부는 지역발전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非수도권 지역에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전략신도시를 구축했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역대 정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들을 통합하고 이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 지속가능개발 등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녹색성장 등 환경보전과 발전을 함께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에너지 과소비적 지역개발에서 탈피하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개발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존 정책 평가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료: 국토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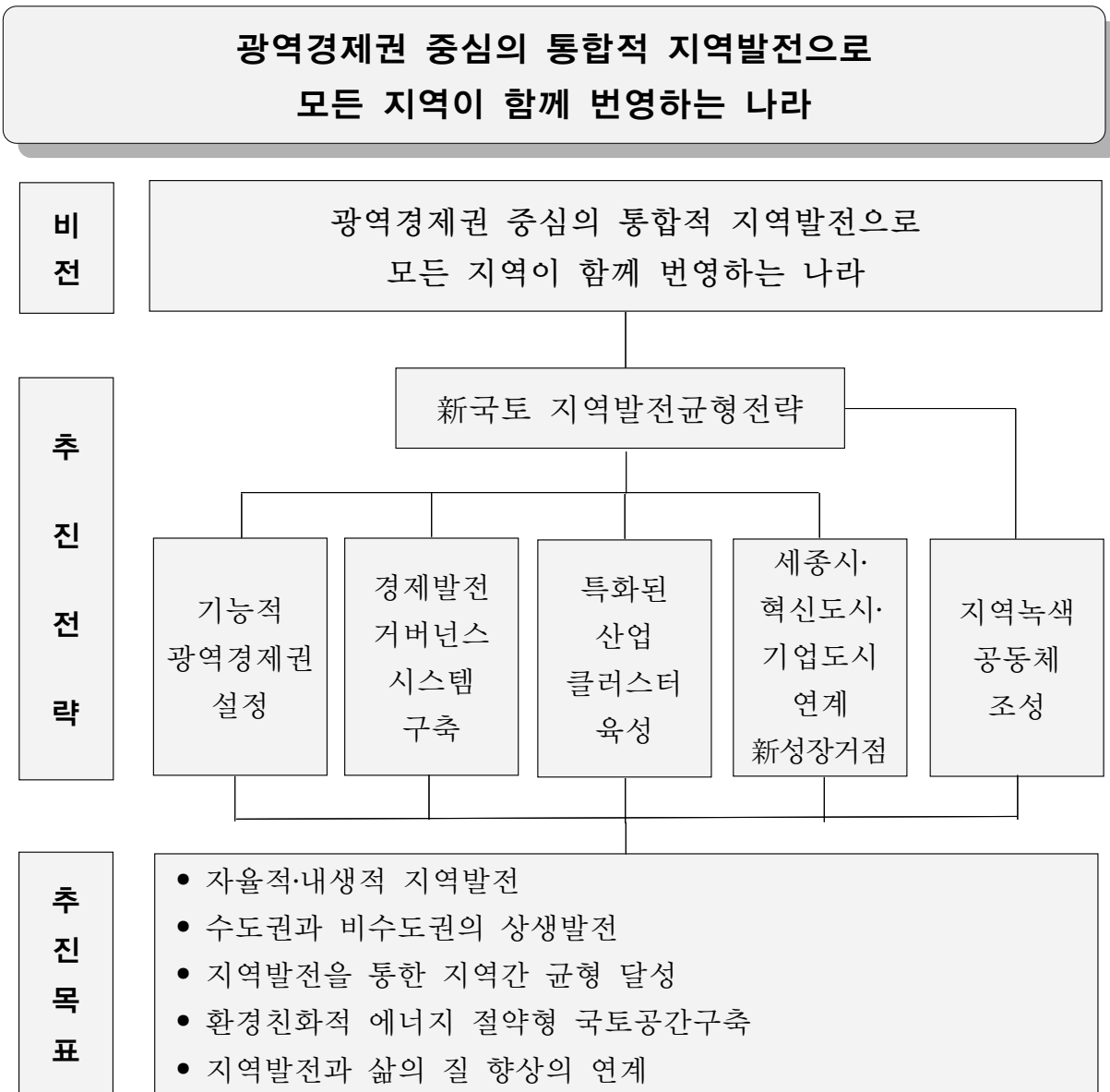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 추진을 표방했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업추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 행복 및 기업도시의 건설, 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각종 시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감은 최대한 높인 반면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 노무현 정부는 지역발전문제를 국내에 초점을 맞춘 한정된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역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는 대신 행정구역간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 구조를 격화시켰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은 선언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중앙주도의 하향식 추진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리한 분산정책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한 반면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이 저조함으로써 정치논리에 입각한 하향식 평준화 지역개발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 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 본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기존 시책 발전·보완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균형발전 논리로 포장된 인기영합식 나눠먹기 지역개발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역간의 상생발전, 광역화와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분권적 지역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유사한 문제로서 선언적 정책의 내용과 실질적인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율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지시 및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적인 발전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지역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간 조정이 원활치 않으며 부처간, 부처내, 회계간, 중앙과 지방간 유사 중복사업이 허다하다.
-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추진주체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중심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전략은 광역단위의 통합적 지역발전 체제 구축(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즉 자율적·내생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간 균형을 견인하고 그 결과로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발전-균형의 접근방법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지역간 균형을 맞추려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전략 추진을 위해 지역의 공간단위로 기능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가 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발굴하여 자생력있는 복합경제권을 육성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 광역적 지역경제권 단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권 단위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경제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 및 지방의 도시개발, 기업지원 조직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업 클러스터는 과거의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적 틀로서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광역경제권에 해당 지역에서 발현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개별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발전의 성장거점화한다.
-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으로 발전시킨 ‘지역 녹색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
-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전략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중심의 자율적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발전의 균형을 제고한다.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국토공간구조의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며, 녹색성장을 선도한다.

II. 정책과제

정책 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광역권별 자율적·통합적 발전 전략 수립

- 新국토 지역발전균형정책의 큰 원칙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의 광역권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되, 발전전략은 광역권별 자율적·통합적 발전으로 획기적 변화를 도모한다.
- 광역권 중심의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집적과 네트워크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광역권내에서 중심도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되, 동시에 권역내 도시들은 각자의 잠재력에 기초하여 특화발전을 하고 도시들 간에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 집적의 이점을 누리게 할 중심도시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육성 등과 같은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기반경제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금융, 광고, 법률, 회계 등 생산자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 광역권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내 도시들간 근접성 제고, 독립된 노동시장 형성, 기능의 전문화, 상호작용 확대 및 상이한 역사적·정치적·문화적 특성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광역권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광역권내 산업들 사이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광역권별로 주축산업을 찾아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다양화와 특화적 지역 발전을 실현한다.

□ 《실천과제 3》 광역권역내 교통망 획기적 개선

- 광역권역내 개별도시간 시간과 거리가 가장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확충 정비하여 인적·물적 상호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여건에 따라 각 권역별 국제적 항구와 국제적 공항을 건설하여 세계화 시대에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광역권별로 세계시장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광역권들이 특화된 지역에 대한 국제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실천과제 4》 광역경제권 조합 설립

- 광역경제권의 관리주체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광역경제권 조합으로 설립을 추진한다.(지방자치법 제149조) 광역경제권 조합은 독립적인 추진체로서 광역경제권의 성장을 이끌 선도사업의 선정, 추진, 예산배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 광역경제권 조합은 조합의회(의결기관)와 조합장(집행기관)으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방식인 대립적 기관구성방식에 따라 구축한다.
- 광역경제권 조합의 기능은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서 광역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도간 연계사업에 국한함으로써 시·도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도 고유의 자치사무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사무를 결정한다.
- 광역경제권 조합이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자금조달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권역 내 회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책 2 지역녹색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삶의 질이 선진화되는 녹색공동체 만들기’

- 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선진화되는 녹색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한다.

□ 《실천과제 2》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지역공동체 창조

- 지역주민의 협력과 통일된 사회적 의지(social will)의 추구라는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근간으로 삼되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활성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될 ‘녹색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경제성(Economy), 환경성(Environment), 형평성(Equity), 즉 3E를 고려한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 경제성 측면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이 된다. 환경성 측면에서는 생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망 구축과 복지공동체 형성 등이 그 내용이 된다.

□ 《실천과제 3》 지역자율형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조성

- ‘녹색공동체 만들기’는 미래지향적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지역이 사업선정과 기획 및 집행 등 제반 과정을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방식으로 추진한다.

분야	목표	사업/프로그램
경제활성화 (Economic Vitality)/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운동/ 기존공단 리모델링 사업 ■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 지역특화상품 개발·판촉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Community Business) 육성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취업·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과 재교육사업 ■ 창업지원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개발 사업/친환경 에너지재생 사업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생태·휴식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조성 (근린생활권별 식목사업) ■ 산·하천 연계 친환경 공간조성사업 ■ 생활하천 레포츠공간화 사업/ 아름다운도시 조성 ■ 건강코리도사업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등 확장등)
사회적 형평성/삶의질 (Social Equity)	취약계층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복합도서관건설 사업 ■ 방과후 학습기회 확충사업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
	복지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확충 사업 ■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선진화사업
	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리모델링 사업 ■ 옥외광고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주거지 혐오시설 정비사업
	시민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네트워크 사업 ■ 주민건강진단 사업 ■ 건강 코리도 사업

정책 3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 지방재정의 확충은 자체세입 확충을 기본으로 하되 의존재원 확대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지방세입은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과 같이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지역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확충한다. 의존재원 확대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확충과 국고보조율 인상과 같은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동시에 사도세의 일부를 사군구 세목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실천과제 3》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 경마경륜경정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로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시 지역간 세율편차에 따른 불균형, 사업자의 반발,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사례를 활용, 사도에 '체육진흥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 《실천과제 4》 지방교부세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간주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재정부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보전기능이 100% 발휘되는 수준까지 확충하고, 이양사무의 비용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역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하여 이양전 국고보조율 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 《실천과제 5》 특수상황지역 국비지원 확대

○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특수 상황지역의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을 80%에서 100%로 인상하여 우회적으로 지방재정 증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100% 보전, 분권교부세 7개 사업 국고환원,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등으로 확충되는 지방재정 규모는 약 4.1~4.8조원이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9.24%에서 20.61%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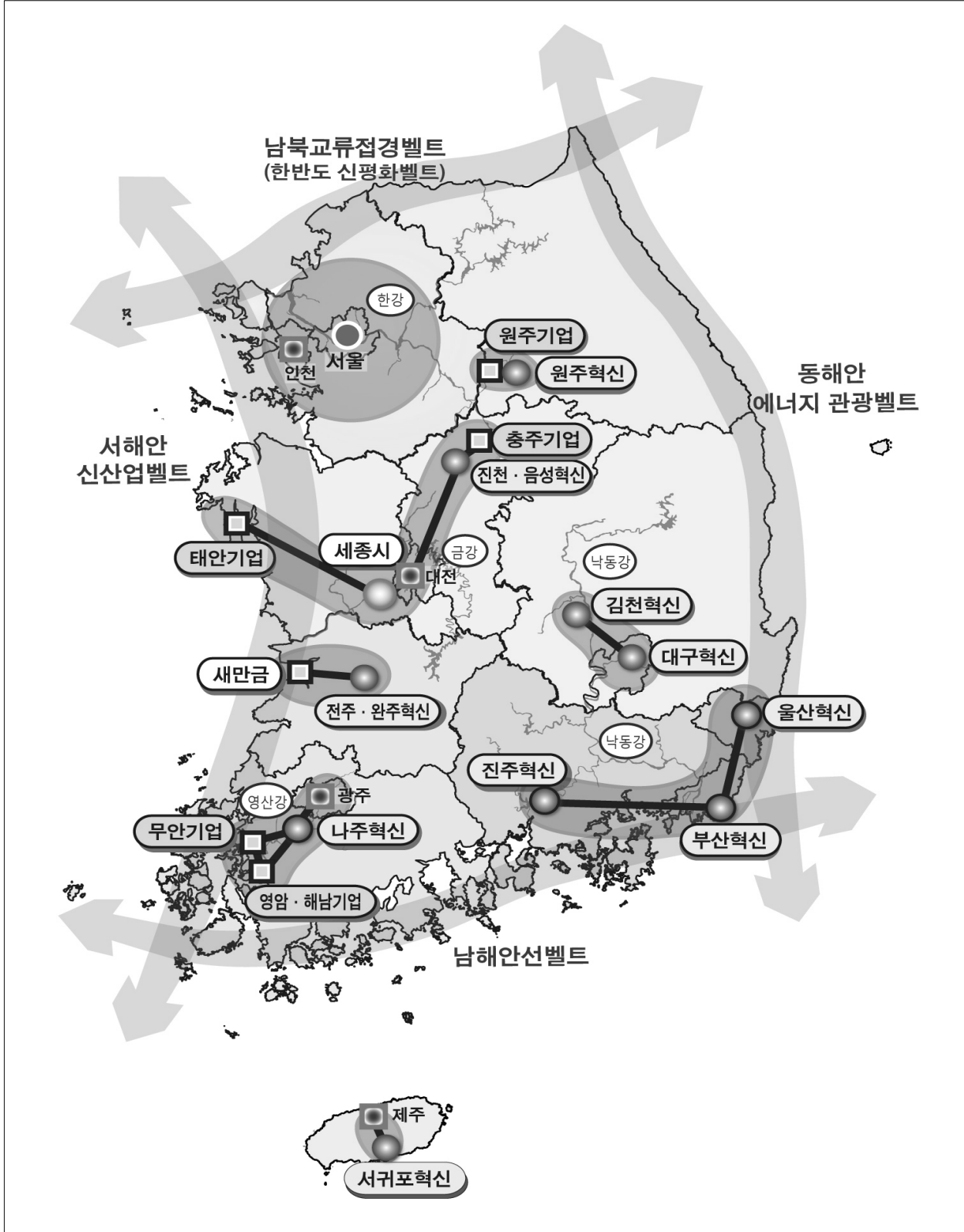
지방재정 확충규모	지방 소비세	지방교부세			특수상황 지역 국고보조율 인상	레저세 과세 확대
		소 계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41,604 (48,042)	25,000	12,307 (18,745)	8,947	3,360 (9,798)	383	3,914

* 보통교부세 확충액 : 12,861-3,914 = 8,947억원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19.24%에서 20.14%(분권교부세 7개 사업 국고환원) 혹은 20.61% (분권교부세 7개사업 존치) 수준으로 인상

정책 4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를 연계하여 新성장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新성장거점도시로 육성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발전의 전진기지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新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한다.
- 세종시, 혁신도시(10개), 기업도시(5개)들은 이제 개별 사업별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발전의 기본구도 하에서 지역간 연계 및 협력적 발전으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
- 이들 新성장거점도시는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산업, 물류, R&D, 교육 등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 및 광역적인 발전을 활성화한다.
- 新성장거점도시 조성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장기 미착공, 투자부진사업 등은 개발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조정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며, 도시간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

□ 《실천과제 2》 행정-지식산업 융합형 新성장벨트 조성

- 세종시와 인근의 대덕 R&D, 오송(BT), 오창(IT, ET), 천안·아산 등 과학연구 및 산업거점기능과 함께 교육·문화와 융합기술도시를 지향하는 충북 혁신도시 등을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행정-지식산업 융합형 新성장벨트’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인근지역, 충청권, 5+2 광역경제권 등을 연결한 ‘지역-광역-초광역’의 3차원 지역발전으로 국토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 《실천과제 3》 한국형 유비쿼터스 녹색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조성되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는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태산업단지,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시티 기능 등을 갖춘 한국형 유비쿼터스 녹색(Ubiquitous Green) 도시로 조성한다.
- 에너지절약형 솔라시티(Solar City)를 지향하는 대구 혁신도시와 신재생에너지, 농업 및 생물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 등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도시계획, 자원순환시스템 등에 있어 녹색특화형 모델도시 컨셉을 중점 반영하도록 한다. 강릉 등에 추진 중인 녹색시범도시 모델을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에 접목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녹색분야의 산업과 R&D 등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성장형 도시권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 《실천과제 4》 인백산업(INBEC)밸리 육성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新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나노(NT), 바이오(BT), 환경(ET), 문화컨텐츠(CT)’ 등 미래 경쟁력을 갖는 첨단기술의 ‘인백산업(INBEC) 밸리’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실천과제 5》 광주·전남(나주)혁신도시 신재생에너지 특화분야 중점유치

-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이전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화분야의 기업, 연구소 등을 중점유치하고, 인근의 광주 광산업과 같은 유관분야와 상호보완적 발전이 되도록 한다.

□ 《실천과제 6》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구성에 있어 각 도시와 인근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발적이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속적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혁신도시는 주변에 분포된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교육훈련,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사업을 통해 신제품개발, 기술고도화를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산업, 관광 등 분야에 특화된 기업도시는 인근의 시·군에 분포한 유관기관들과의 광역적 파트너십을 갖추도록 한다.

□ 《실천과제 7》 초고속교통망과 정보의 원활한 연결과 소통으로

지식·정보·물류의 융합적 발전 도모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新성장거점도시는 초고속교통망과 정보의 원활한 연결과 소통으로 지식과 정보, 물류가 융합된 새로운 발전을 창출한다. 新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권과 전국 주요지역을 KTX 등 초고속 교통망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과 비즈니스의 거점역할을 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도로, 철도 등 복합교통체계(intermodalism)를 갖추어 대중교통 중심 지역발전(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공항, 항만과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형성 기반을 강화한다.

□ 《실천과제 8》 세종시·혁신도시 업무수행 환경조성 및 정주기반 조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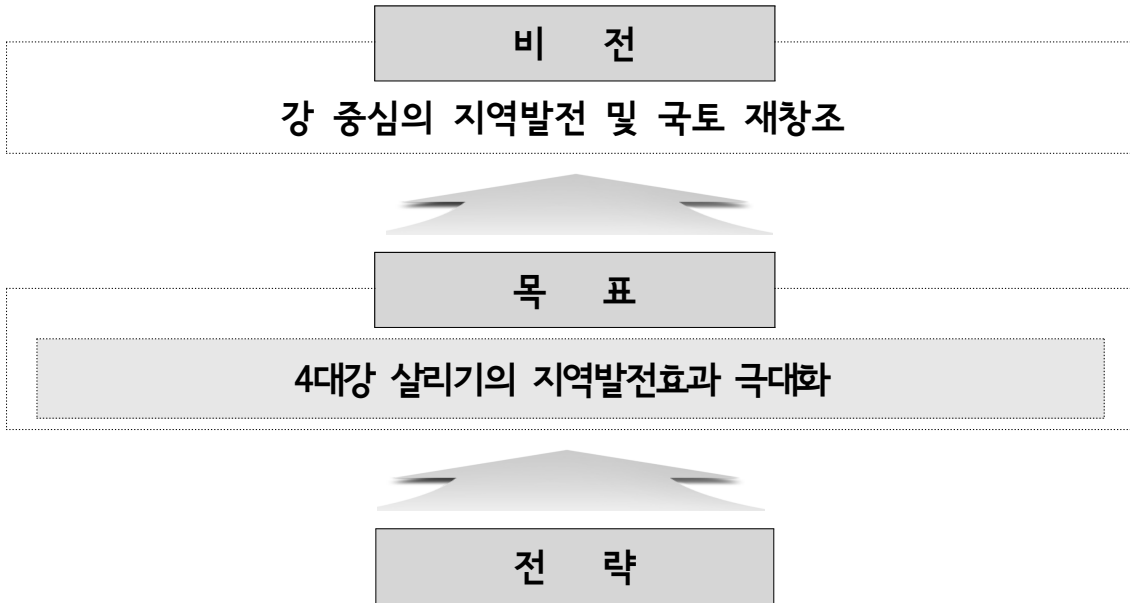
-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조성되는 도시인 만큼 이전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조성 및 공공기관 이주 직

원과 가족의 정주기반이 조기에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제도를 개선을 하고, 지자체는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실천과제 9》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업도시 지원방안 재정비

- 기업도시는 민간의 효율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금융제도 보완 등에 대해 기업요구를 고려하여 재정비한다. 지원방식도 종전처럼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총량적 나열형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입지, 지역의 경제산업기반, 이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한다.

정책 5 4대강 친수구역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1 강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
- 2 강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 3 4대강을 따라 녹색성장건강복지 기반조성
- 4 4대강과 연계한 지방하천 살리기
- 5 강산해 통합 국토환경 조성

□ 《실천과제 1》 강 중심의 통합적 지역발전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광역적 공유자원인 강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강을 따라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新지역공동발전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 新지역공동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간 상호 협력, 공동 발전을 유도하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색주거지, 복합업무지구, 복합관광여가단지 등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강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 수변공간과 연계된 水공간 연계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로 확보한 풍부하고 깨끗한 본류의 물을 지류로 도수하여 지방하천의 수량을 확보

함으로써 水공간 연계기반을 마련하며, 도시의 구도심 재생을 강살리기 사업과 연계추진한다.

- 도시 재생시 수변지역에 특성화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성·장소성을 반영한 수변형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여 수변지역의 공공성을 증대한다. 특히, 수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환경을 활용하는 리버워크를 조성하여 도시인의 친수접근성과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 《실천과제 3》 4대강을 따라 녹색성장건강복지 기반 조성

- 4대강을 따라 청정 재생에너지 및 그린홈 단지를 조성하는 등 녹색성장건강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좋은 경관과 환경이 유지될 조망지역을 선정하여 첨단 R&D 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하천내 스포츠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소득 전문인들의 지역유치를 지원한다. 주변에 전원형의 주거단지와 선진교육시설을 연계유치하여 주거와 교육 등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형성한다.
- 4대강 주변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탐방루트를 조성하여 시민의 친수활동을 지원한다.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루터 복원, 과거길·유배길과 안동, 나주, 상주 등 하천변의 역사자원과 시내 문화자원을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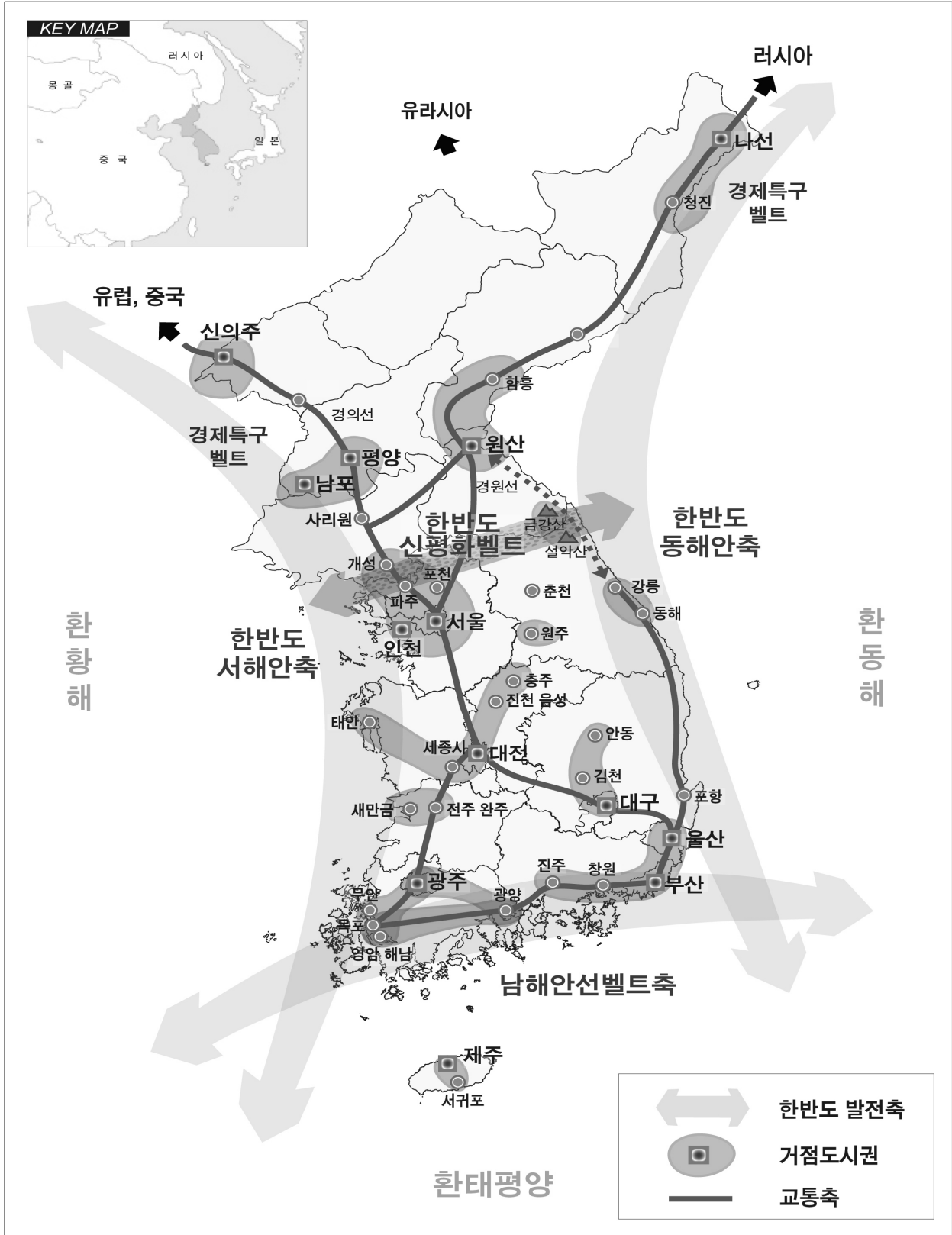
□ 《실천과제 4》 4대강과 연계한 지방하천 살리기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도의 지방하천 살리기로 확대·발전을 도모한다.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방하천유역의 통합적 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하천의 수량수질관리, 홍수관리, 하천연안의 개발과 보전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는 각종 지역개발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포괄적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한다.

□ 《실천과제 5》 강·산·해 통합 관리로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

- 부처별로 분리된 기존의 강산해 관리방식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관리축을 설정한다. 녹색 국토관리 네트워크는 핵심국토관리축, 광역관리축, 도시관리축 및 연결관리축으로 구분하여 각 관리축에 대한 역할 및 공간영역을 설정한다.

정책 6 통일시대에 대비한 新국토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북·중·러 접경지역 협력프로젝트 추진

-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경제통합에 노력하며 통일 한반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한·중간 공조를 통해 북·중 접경지역의 개방거점을 중국과 공동개발 하는 등 새로운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한다.

□ 《실천과제 2》 개성공단 기능 확대

- 개성공단은 단순한 임가공 단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 인프라 협력 전진기지'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관련 기술교육 등 생산과 인적 교류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또한 개성공단은 우리 수도권의 파주, 연천, 인천과 연계 발전을 통해 광역적인 남북경제협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 《실천과제 3》 금강산 관광지구 환동해권 관광지대로 연계 개발

- 금강산 관광지구는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통해 국제관광지대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배후도시인 속초와 원산의 연계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대표하는 환동해권 핵심 관광지대로 발전시킨다.

□ 《실천과제 4》 남북접경지역 新평화벨트 구축

- 남북접경지역에 '新평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안보·생활·정주기반을 강화하고 평화생태관광 실시 등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5》 임진강 평화환경특구 지정


-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유역 전체를 '임진강 평화환경특구'로 지정하여 남북이 체계적으로 이수치수친수 등의 패키지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발전용도로 북측이 개발한 황강댐(총저수량 3~4억³m³)을 남북이 다목적댐으로 개발하는 등 수자원을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고 북측의 강원도 평강, 남측 철원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임진강유역연계 남북생태관광을 실시한다.

□ 《실천과제 6》 연안지역 및 북중리 접경지역 자유무역지대 개발

-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선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한다. 개성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제2, 제3의 특구 개발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개발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한다. 1단계로 먼저 신의주와 나선 개발을 추진하고 이어 2단계로 남포, 원산지역의 개발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7》 동서해안 남북통합 교통인프라 벨트 구축

- 교통인프라 벨트 구축에 있어서 먼저 우리 수도권과 남포, 원산 자유무역지대를 육로로 연결시키는 ‘남북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남북경제통합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한다.
- 서울-사리원-남포를 연결하는 新경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 남포를 2시간대로 연결(문산-남포 200km)하고 ‘경원고속도로’를 통해 원산과 수도권을 연결(260km)함으로써 기존의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남북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
- 남북한 및 동북아 차원의 교통-물류를 체계화하는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우선 경의선 서울-개성-평양구간의 현대화를 시작하고, 상호 교류물동량 확대를 감안하여 경원선 철도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9장. 정치·행정 비전과 정책

신뢰받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

목 차

I. 신뢰받는 정치

1. 비전

2. 정책과제

【정책 1】 공천시기 제도화 및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2】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겠습니다.

【정책 3】 공천제도의 민주화 및 개방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책 4】 국회 예산 기능 강화하고 국회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정책 5】 소통과 통합, 분권을 지향하는 창조적 정당이 되겠습니다.

II.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

1. 비전

2. 정책과제

【정책 1】 미래를 대비한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책 2】 복지서비스, 재난방자치안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정책 3】 공정한 인사, 비리척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책 4】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제9장. 정치·행정_비전과 정책

I. 신뢰받는 정치

1. 비전

신뢰받는 정치

- 우리 사회에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주의 공고화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크게 향상되었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대폭 확대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과정도 공정성이 제고되어 두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대선 5회, 총선 6회가 치러졌으나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화 20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고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국민의식이 성숙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치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가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으며 정치퇴행이 다시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 상실로 국론분열이 상시화되고, 여야간의 몸싸움으로 상징되는 정치권 극한대결이 반복되고 있고, 법치주의 붕괴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밀실공천·낙하산 공천 등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권위적인 정치문화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
-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의 확립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좌절되고 있는 이유를 경제적인 조건보다 정치선진화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회분야의 발전과는 달리 정치 분야에서의 담보와 퇴행이 여타 부분의 발전까지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 수준을 넘어 완전한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국민통합→국가발전→국민의 행복도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의 신뢰회복이다.

2. 정책과제

정책 1 공천시기 제도화 및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공직자 후보 추천 시기 명문화

- 정치엘리트들에게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와 정당선택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공천시기를 제도화한다. 선거에 임박해 ‘사천’(私薦) 논란을 빚으며 쫓기듯 공천해 온 그간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20일 전까지 공천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에 공직후보 선정시기를 명문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당법과 선거법 등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도록 한다.

□ 《실천과제 2》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 상설의 독립적 획정위원회를 설립(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하고 그 구성과 운영방식 및 구속력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의 탈(脫)정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획정절차와 기준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인구 동등, 지역공동체, 교통,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각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의 예비지도를 작성 발표(예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지역당원협의회, 일반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한다.

□ 《실천과제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

- 윤리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의원 20인 이상 요구에서 10인 이상 요구로 완화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한다.
-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의 강제화를 추진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국회 본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화되도록 한다.

정책 2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도입

-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을 대폭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한다.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당추천 후보에 대한 개별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의 민주화 및 소속의원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 《실천과제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맹목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준거로 투표하는 정책정당화를 유도,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해당권역의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권역별 제한식으로 추진한다.

□ 《실천과제 3》 석패율제도의 도입

-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등록 방식을 변경하고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책 3 공천제도의 민주화 및 개방화를 이루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 민주화개방화

- 공천심사기준은 비례대표 선거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천심사 이전에 그 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심사방식의 경우는 공천심사를 제대로 하고 공천 이후 당내외, 특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한다.
-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절차의 결정에 있어 정당지도부가 아닌 당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에 정당내의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도록 하며 공천심사위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 《실천과제 2》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 일부 전략공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정당 지배구조 변화 및 정당 민주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
- 1) 중앙당의 공모, 2) 중앙당 심사기관의 심사 및 선정, 3) 당협별 국민참여형 선거인단회의의 투표와 선출, 그리고 4) 중앙당의 승인 및 추천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한다.
- 공천심사를 담당할 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그 구성과 운영방법 및 결정과정 등이 중앙당의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일 수 있도록 당헌 당규 등에 구체적으로 제도화한다.

□ 《실천과제 3》 국회·지방의원 공천시 청년의무할당제 실시

- 청년을 비롯한 사회 여러 집단들이 공평하게 의정과 지방자치에 참여할 때 모든 시민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가 가능함으로 성인 인구의 40% 이상을 점하는 청년층의 의회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공천시 청년할당제를 실시한다.
- 국회의원 선거 공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10%에 해당하는 25석과 5석을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의 50%(제5회 지방선거 광역 36명, 기초 160명 당선),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1명을 20대와 30대로 의무 공천한다.

정책 4 **국회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국회 예·결산 기능의 강화

-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되,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심사”의 심사과정은 유지한다. 예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금지하며, 예결위 소관 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 중 예·결산 관련 사항과 감사원의 소관업무 중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국회의 결산 관련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가칭)결산심사처를 신설하거나 예산정책처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 《실천과제 2》 법안 자동상정제 및 필리버스터제 도입

- 여야의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의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법안 자동 상정제를 도입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동시에 여야간 극단적인 대결정치 대신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정착할 수 있는 유인기제로서 의회 내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허용한다.
-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각 단계에서 일정기간 내에 의결되도록 한다.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24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발의된 법률안은 경과기간(제정20일, 개정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어 상임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논의기간 90일, 그리고 본회의 상정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과정에서 상임위 의원 1/4 이상이 요구하거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논의한다. 법안 자동상정제와 처리기한의 신설 및 법안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전제로 국회의장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 및 직권상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화한다.
- 필리버스터 허용 및 클로저와 표결처리 보장을 골자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하여 처리기한(상임위 처리기한 - 180일, 본회의 처리기한 -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필리버스터 요청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의 일정 수가 찬성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도록 한다. 또한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과제 3》 국회 표결시 당론 구속범위 최소화

- 국회 표결에서의 당론 구속 범위 최소화를 위해 “언더라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론에 따라야 할 사안, 가능한 한 당론을 존중하기를 권하는 사안, 의원 소신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할 사안 등을 구분한다.
- 당 지도부는 사안별로 당론 구속의 범위를 정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한다. 언더라인에 따라 의원들은 자신의 투표 의사를 정하되, 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사안의 경우 당론 투표가 의무화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당의 정체성이나 주요 공약 등과 관련된 경우 당론에 따른 의원 표결을 의원 총회에서 재적 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5 소통과 통합, 분권을 지향하는 창조적 정당이 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소통과 통합, 분권을 지향하는 창조적 정당

- ‘소통과 통합, 분권을 지향하는 젊은 정당’을 위해 미래 정당 조직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선거조직으로서 ‘개방형+국민참여형(型)’ 정당 기초 조직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선거가 없을 때 정당조직은 정책 형성과 제안을 위한 의견수렴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선거가 있을 때 정당조직은 개방적인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기초 조직으로서 유권자 정치참여의 기본 단위이며, 주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정치교육의 장(場)인 동시에 주민의사 수렴 창구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 당의 기초조직은 해당지역의 공직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거나 또는 공직후보 추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 정당의 기초조직은 위원회 중심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한하여 민주적 개방적으로 운영한다.
- 정당내 각종 선거에서는 선거공영제를 통해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 《실천과제 2》 의원 입각 제한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제29조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토록 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다.

II.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

1. 비전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공감행정

-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시스템, 즉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 정부부처의 통폐합, 공무원 수의 감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약과 긴축을 그 기조로 하였다. 그리고 세금부담도 줄였으며, 행정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 그러나, 정부 운영에 있어서 능률성 및 속도를 중시한 결과, 일방독주형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정의 긴축과 정부지출의 절약은 바로 복지서비스 부족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제 변화하는 세계적, 국내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증대하는 질적·양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하며 국민의 증대하는 복지수요와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확충하고 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더욱 내실화하여야 한다.
- 시대적 요구인 “민주·복지·문화정부”로 발돋움하면서 “국민에 봉사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정부”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 정부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운영,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등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크다. 정부의 시스템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정부의 기본적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2. 정책과제

정책 1 미래를 대비한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할 ‘미래부’ 신설

- 미래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의 자원배분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래전략기능을 통합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인 ‘미래부’를 신설한다. 기존의 자원배분 기능을 전략수립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미래기획에 의한 전략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정비한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조정기능을 국무총리실에서 신설된 ‘미래부’로 이관하여 미래전략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 《실천과제 2》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출산율 증가정책을 펴으로써 고령화 비율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인력들이 계속 사회에서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
- 사회적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확산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3》 모바일 정부, 스마트 행정 구현

-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전자정부의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에서 통합된 전자정부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개별 국민의 행정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다.
- Web 2.0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기반한 디지털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전자정부(E-Government) 수준을 뛰어넘어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차세대전자정부 모델인 모바일정부(M-Government)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 행정의 질과 근무환경을 개

선한다. 업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전통적 업무처리시스템과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스마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한다.

□ 《실천과제 4》 책임총리제 실시

-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추진한다.
-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상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는 권한위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 헌법상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 권한위임제도를 활용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분권형 역할분담모형을 도입·정착시킨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보다 국민통합적인 국방·외교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경제·사회·복지 등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분담 모형을 발전시킨다.
-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의제(테마)회의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정회의로 구분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정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정책 결정과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국무총리에게로 가져오도록 한다.

□ 《실천과제 5》 공공기관 경영 선진화

-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책임경영, 그리고 코드인사에 대한 지속되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장성과 경쟁력 그리고 기능과 규모를 고려한 민영화나 기관통합 등의 전략적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성과와 경쟁이라는 기치 하에 민영화 조치를 위하여 분할한 기관의 실제효과가 미흡하거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략적 개선방향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능에 따른 맞춤형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다.
- 공공기관의 미션을 재정립하고 향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원자력 등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
-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관장 공모제의 내실화 및 기관장 선임에 대한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등 투명한 기관장 인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운영을 확보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의 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 국가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부채 및 과도한 복리후생비 조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기관에 경쟁과 퇴출을 도입하여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관이 취직하기에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장으로 인식되도록 성과 중심의 업무 문화 및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2 복지서비스, 재난방지·치안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복지서비스 부분의 조직·인력 확대 및 전문화

- 폭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 서비스 조직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재구축한다.
- OECD 국가간의 행정분야별 인력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인력구성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으므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비율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한다. 현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역량진단 및 능력개발을 통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학교안전·아동성범죄 전담조직 확충

-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학교안전반 및 아동반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아동 성범죄 전담수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동대를 확대 편성·운영하고 통합수사지원팀을 구성한다.
- 학교 내에는 순회감시조직을 설치하여 범죄가능성을 차단하며 학생안전교육반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및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폭력·아동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피해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신

고,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 및 아동 성범죄는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학생과 아동이 자주 활동하는 근접 지역별로 교육기관, 경찰관서, 학부모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학교에 성범죄 상담을 위한 전담교사를 두고, 전담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상담인력을 양성·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실천과제 3》 재난안전시스템 선진화

-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및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기상·기후예보 및 사고발생의 통계정보를 이용한 재난발생 시점·장소·양태에 대한 예측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예측시스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근 국가 및 선진국과의 재해 징후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재난사고 방지시설 등 예방체계를 구비한다.
-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협력적 통합체계 구축한다. 초기대응 및 협력적 대처를 위한 자동비상연락체계와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을 가장 먼저 인지한 조직과 인력, 현장에 가장 근접한 조직과 인력이 초기단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결정을 내리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로 바꾼다.
- 재난관리 업무는 3D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힘든 직무로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재난인력 전문화 및 경험축적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며, 순환보직을 억제하고, 전문역량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정책 3 **공정한 인사, 비리척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 검찰·경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할 독립적 수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다. 이 기구에서는 국회, 검찰, 법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한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 공직부패수사처의 長은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 엄정하게 선출한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대통령 3인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현재 고위공직자 직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변호사가 구성원의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 공직부패처의 처장과 차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처장 후보자는 공직자 비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차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있었던 자로 한다.
- 공직부패수사처의 내실있는 구성과 운영을 보장한다. 수사처의 규모는 대략 특별검사 50인 이내로 한다. 특별검사는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 재직한 자로 한다.

□ 《실천과제 2》 공정한 공무원 인사 확립

- 전문성에 입각한 특채제도는 특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채선발의 기준을 미리 제시하며 선발절차를 매뉴얼화하여 그 공정성을 보장한다. 특채제도의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 정부내의 공정한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인사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정부 인사제도의 실적주의를 보호하며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감시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부당한 인사운용에 대한 감시역할과 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중립적인 위원회 조직의 구성을 추진한다.
- 조직내의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 내부자의 비리 제보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공익 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 《실천과제 3》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강화, 공무원 퇴직자 유관기업 취업 규제 강화

-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운영하여 정무직 임명에 있어서 중간에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수석급으로 인사기획관을 임명하여 인재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정수석의 검증기능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 장관 인사청문회는 현재처럼 개인의 비리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정책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 개인적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 적격선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검증기준을 강화하여 부적격자를 사전 탈락하도록 한다. 적격선별위원회는 외부 인사전문가와 내부 실무자로 구성하며 국민정서에 비춰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형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운영, 비리와 부적격 요소가 철저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한다.
- 일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 취업하여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고 공직윤리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고, 위반한 민간조직과 취업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간조직에서 로비를 위한 무차별적 공직자 영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정책 4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축소, 행정구역 광역화

- 광역자치단체 중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과 시·군·구 지역의 중간규모로 자치단체를 재구성하여 행정계층 축소와 행정구역 통합을 동시에 달성한다.
- 정치중립적 행정구역개편을 위해 행정구역개편 전문가와 각 지방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실천과제 2》 지방자치단체장 책임부과제도 도입,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무분별한 개발투자, 호화청사건립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은 없으며, 조직축소, 인력절감, 사업재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눈에 띄지 않고, 지방의회의 견제역할도 부족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 방만한 개발투자나 이벤트성 행사 방지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조직진단 법규화를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낭비성 예산 삭감, 지자체 자체세원 마련 및 체납세 징수기동팀 가동 독려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한다.
-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책임부과제도 및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임기 중에 사업을 벌여놓고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후에도 그 내용과 결과에 책임지게 함으로써, 업무수행시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실행하는 등 엄격한 재정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재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옴부즈만을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알려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정책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평화·적극적 통일을 통한
선진통일국가 실현

목 차

I. 비 전

1. 기존정책 평가

- 야당 정책의 평가
- 한나라당 정책의 평가

2. 새로운 비전

- 비전설정
- 정책방향

II. 정책과제

【정책 1】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2】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대북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3】 ‘한반도 新평화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정책 4】 21세기 선진통일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정책 5】 한반도 녹색평화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6】 북한동포의 인권신장 및 인도주의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7】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격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8】 한반도 주변국과의 ‘평화·통일’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9】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장. 통일·외교·안보_비전과 정책

I. 비 전

1. 기존 정책 평가

□ 야당정책의 평가

-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비용으로 전용:**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 모두를 ‘북한’이라는 틀로서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지원이 핵무기 개발 등 김정일 정권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다.
-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부족:** 야당은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태세에 대한 북한의 오관을 초래하였다.
-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 견인에 실패:** 상호주의가 결여된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실패하였으며, 통일보다는 분단체제의 유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대북·통일관을 심어주고 남남갈등을 심화시켰다.

□ 한나라당 정책의 평가

- **對국민 설득 노력 부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잘못된 평화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지만, 한나라당은 ‘反통일·전쟁’세력이라는 허구적 덧에 구속되어 햇볕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 **통일비전의 제시 미흡:**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개방이라는 대북정책의 틀에만 매몰되어 통일비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反통일세력으로 오해받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 **대북정책 수행時 전략적 유연성의 부족:** 대북정책 수행時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 존중,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등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강경·온건의 투트랙(two tracks)을 구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나라당은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현실과 목표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 새로운 비전

□ 비전 설정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당당한 평화·적극적 통일을 통한 선진통일국가 실현**

-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데 이어 21세기 글로벌 중심 국가로 발돋움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선진일류국가는 한반도 전역의 선진화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를 위해 북한동포를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남북한이 상생공영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 정책방향

- **당당한 평화**
 -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미동맹과 주변국가와의 선린평화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실현한다.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여 얻어지는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절대 불용하는 **당당한 평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한미동맹과 주변국들과의 선린평화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 등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킨다.
- **적극적 통일정책으로 선진통일국가 실현**
 - 기존 통일정책은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초점을 맞춰 통일문제를 소극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방관하였다.

- 이제 우리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통일은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복원하는 복고적인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자유·인권·행복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통한 선진화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남북한 주민이 합의하는 통일을 실현한다.
- 통일문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북한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

II. 정책과제

정책 1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북핵문제 및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로 말미암아 남북대화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先 사과 없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남북한간 긴장 해소와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군사적 대화 및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북한동포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정치적·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하고 추진한다.

정책 2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긴급구호를 위한 대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의 경제자립을 돕고 북한동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예: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뛰어넘어, 중국·EU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모델 및 ‘남북한 공동자유경제특구’를 개발한다.
- 북한의 풍부한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한다.

정책 3 ‘한반도 新평화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하여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한반도 新평화구조’를 창출한다.
-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신평화구조의 창출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포함한 남북한간 군사적 긴

장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가능하다.

-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6자회담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며, 동시에 한국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남북대화의 핵심의제로 올리지도 못하고 핵문제 해결의 대응조치에 따른 부담만을 분담하는 그동안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특히 비핵평화국가의 목표에 부합하게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소 군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과정을 촉진하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군비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 불능화가 완료된 이후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화포럼(평화체제 4자협상)’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의 채택을 추진한다.

정책 4 21세기 선진통일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달성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선진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통일은 유·무형의 분단비용 해소와 함께 통일이 가져다주는 미래재의 가치를 포함한 통일편익(benefit)이 통일비용(cost)을 훨씬 능가한다.
 - 미래재 가치 증가: 북한의 지하자원개발, 토지 및 인구 등의 증가, 저렴한 노동력, 큰 시장, 대륙과의 연결로 인한 수송비 절감 등
 - 분단비용 절감: 군사비 절감(평화관리 비용 절감), 지정학적 분단 리스크 감소로 신용도 상승 등
 - 정치·사회적 편익 증가: 통일로 인한 국민생명 위협 감소, 한민족의 자긍심 고취, 민주주의 확산 및 정착 등
- ‘빠른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바른 통일’이며, 이를 위해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의 강화와 이질성의 존중이 실천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

- 북한 급변사태와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기금’을 설립한다. 통일기금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과 통일세로 충당한다.

정책 5 한반도 녹색평화존을 조성하겠습니다.

- 군사적 긴장이 높은 남북접경지역에 녹색평화존을 추진하는 1차적 목적은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며, 2차적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함이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한 긴장완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변 안전과 3通(통행·통관·통신) 보장時 지속 추진한다.
- DMZ에 녹색평화공영도시를 건설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을 연결하여 ‘공동자유경제특구’를 건설한다.
- 금강산-설악산을 연결하는 동부지역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 인천-칭다오(혹은 다롄)-남포를 잇는 한국-북한-중국 삼각경제권을 구축한다.
-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수해방지사업, 산림녹화, 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남북한 당국과 민간이 참여하는 ‘한반도 재해·재난 공동대책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 녹색성장위원회에 남북협력팀, 통일부에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여 남북한 공동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정책 6 북한동포의 인권신장과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분단고통의 해소를 위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 이산가족의 상봉을 정례화하고 서신교환, 고향방문, 재결합을 적극 추진한다.
 - 이산가족 상봉時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할당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 先송환, 後지원방식의 상호주의를 추진한다.
- 인권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정부와 국내 NGO가 역할 분담

을 통해 개별국가의 의회, 정부, 유엔, 국제인권 NGO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적 연대를 토대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북한인권법’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촉진과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책 7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격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견국가(middle state)의 위상에 걸맞게 품격있는 공헌외교를 펼치고, 가치와 비전에 기반한 다원주의, 다자주의와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외교를 추진한다.
- 구미중심 외교전략의 탈피와 개발도상국 중시전략: 구미 중심의 강대국 외교로의 과도한 집중보다 우리의 외교 대상과 영역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고, 다자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 기제를 창설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교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초당적인 대한민국 외교비전 확립: 미국이 liberty · freedom · democracy, 중국이 평화공존 등으로 모든 외교결정과 행태가 정당화되고 당위성을 가지듯이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둔 외교비전을 수립한다.
- 국가적 외교 싱크탱크의 구축: 외교를 국가별, 사안별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전문분석기관을 설립한다.

정책 8 한반도 주변국과의 ‘평화·통일’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적 외교 목표·가치 확립: 다원주의, 다자주의, 포용주의,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목표와 가치를 확립한 가운데 국익중심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
-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이익 추구: 현 한반도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확립은 필수적이며, 전략은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병행한다.
- 주변국 외교의 이분법 접근방식 탈피: 우리의 국가위상과 국익을 충족하기 위해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분법적 패턴을 탈피해 나간다.
- ‘당對당’ 외교 중심의 對中정책 추진: 한중관계에서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개선 및 유지에 적극 나서는 당對당 외교를 강화한다.

- 한·중 및 한·일 FTA의 체결 적극 추진: 한·중·일 FTA의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진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정책 9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로벌시대에 재외동포나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동포의 권익과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마련한다.
-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강화, 재외동포 관련 예산 확대, 모국과 동포사회간 유대 증진 활성화, 재외동포 활동인프라 구축, 재외동포 권익신장 재외동포 관련 정보수집 및 D/B구축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 재외국민의 참정권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표소 확대, 투표등록 간소화(이메일, 우편 등 활용), 선거관리 인력 확충 등의 정책들의 전향적 추진을 점진적으로 검토한다.
- ‘한민족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